

제23차 여성정책포럼

■□■□■□■□■□

# 『북경 +10』 이후 여성정책의 새로운 도전

---

일 시 : 2004년 11월 24일(수) 14:30 ~ 17:30

장 소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공동의 장 5층 국제회의실

한국여성개발원

# 초 대 의 글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북경 +10』 이후 여성정책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2004년도 「제23차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1995년 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은 성 주류화를 성 평등 달성을 위한 전 지구적 공식 전략으로 채택함으로써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한국 여성정책은 여성관련법의 제·개정, 여성담당국가기구의 설치 등 제도적 장치의 확대와 정비를 통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성 주류화 전략은 실행 도구에 대한 지식 및 인식 결여, 전문인력의 부족, 사회적 편견 등 한계와 장애요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제4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북경행동강령 및 2000년 제23차 여성특별총회 결과문서의 점검과 평가를 위한 “『북경 +10』 고위급회의”를 개최하여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과제와 향후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지난 10년간의 우리나라와 아태지역 여성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 주류화 정책의 발전을 위한 향후과제와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유익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 11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서 명 선

# 행사 일정

- 14:30 - 15:00 등록
- 15:00 - 15:10 인사말 : 서명선(한국여성개발원 원장)
- 15:10 - 15:40 **주제발제**  
 사회 : 정순영(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주제 I : 『북경 +10』 성과 및 평가**  
 발표주제 1 :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성과 및 평가  
 발표 : 강선혜(여성부 국제협력담당관)  
 발표주제 2 : 아태지역의 성과 및 평가  
 발표 : 이선주(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15:40 - 16:00 **주제 II : 향후 여성정책 과제**  
 발표 : 김양희(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16:00 - 16:15 휴식
- 16:15 - 17:00 **지정토론**  
 황인자(서울시 복지여성정책보좌관)  
 양승주(노동부 고용평등국장)  
 서영주(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  
 김혜선(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  
 김선욱(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신혜수(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부의장)
- 17:00 - 17:10 **주제 III : 『북경 +10』 관련 유엔활동**  
 발표 : 강선혜(여성부 국제협력담당관)
- 17:10 - 17:30 종합토론
- 17:30 - 폐회

## 주제 I. 『북경+10』 성과 및 평가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성과 및 평가 .....	1
I. 세계여성회의와 북경행동강령 .....	3
II. 『북경+10』 관련 국가이행보고서 .....	5
아태지역의 성과 및 평가 .....	23
1. 북경행동강령의 성과와 과제 .....	26
2.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문제와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문제 .....	34
3. 향후 양성평등정책의 방향 .....	37

## 주제 II. 향후 여성정책 과제

1. 성주류화의 배경 및 핵심내용 .....	43
2. 한국의 성 주류화에 대한 총괄평가 및 발전과제 .....	44
3. 성주류화 및 행동강령의 이행이 어려운 이유 .....	56

토론 1 .....	68
토론 2 .....	69
토론 3 .....	70
토론 4 .....	71
토론 5 .....	72
토론 6 .....	74

## 주제 III. 『북경+10』 관련 유엔활동

『북경+10』 관련 유엔활동 .....	79
-----------------------	----

주제 I : 『북경+10』 성과 및 평가

##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성과 및 평가

강 선 혜 (여성부 국제협력담당관)

## I. 세계여성회의와 북경행동강령

### ◇ 북경행동강령의 의미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은 여성발전을 위한 나이로비 미래전략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경제·사회·문화 및 정치적 결정에 평등한 참여를 통해 사적·공적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능동적인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 북경행동강령 내용

행동강령의 각 부문에는 여성의 현황과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이 형성되는 사회구조적 장애요인의 규명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차별철폐, 평등추진을 위한 각국 정부·민간단체·UN 등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북경행동강령은 총 6장 361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녀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12개 주요관심부문(빈곤, 교육, 건강, 폭력, 무력분쟁, 경제, 권력 및 의사결정, 제도적 장치, 인권 등)을 선정하여 부문별 행동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12개 관심부문에서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과 이를 위한 여성의 정책 및 의사결정과정의 참여에 있다.

### ◇ 북경행동강령의 목표

궁극적 목표는 '모든 여성의 힘의 증진'이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실현이 필수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 강령에서는 모든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강령의 이행은 국내법과 전략 및 정책, 프로그램과 발전 우선순위의 입안을 포함하여 국가의 최상의 책임으로 규정되고 있다.

## ◇ 북경행동강령이 국내에 미친 영향

행동강령은 우리정부가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국가행동계획수립 및 이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 행동강령이행이 국가적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실시했다. 제4차 세계여성회의이후 복지정책 위주가 아닌 보다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여성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동시에 남녀평등과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사회의 기본여건을 마련하려는 법제정에 박차를 가하였다.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년) 및 그에 따른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여성발전기금 조성, 여성부 출범(2001년), 여성정책조정회의 신설(2002년), 국회여성위 발족(2003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에 미칠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성인지적 정책 및 예산 분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세계여성회의 연대표】

구 분	연 도	장 소	내 용	비 고
제1차	1975	멕시코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지정 '75세계여성의해(IWY)기념</li> <li>- 멕시코 선언 및 세계행동계획(21개항)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평등·발전·평화</li> </ul> </li> <li>- 유엔여성10년('79-'85) 선포유도</li> <li>- 참가규모 12천명(우리대표 5명)</li> </ul>	정부간 회의인 세계여성회의와 별도로 비정부기구회의 개최
제2차	1980	코펜하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여성10년 중간평가</li> <li>- 유엔여성10년 후반기사업계획(287개항)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주제 추가 : 교육·고용·보건에 중점</li> </ul> </li> <li>- 참가규모 : 2천명(우리대표 8명)</li> </ul>	NGO포럼참가자 : 8천명
제3차	1985	나이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여성10년 사업종합평가</li> <li>- 2000년을 향한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372개항) 채택</li> <li>- 참가규모 : 135개국 2천명(우리대표 18명)</li> </ul>	NGO포럼참가자 : 1만5천명
제4차	1995	북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이로비 전략 이행 검토·평가</li> <li>- 평등·발전·평화를 위한 행동강령(361개항)채택</li> <li>- 참가규모 : 189개국 5천7백명(우리대표 36명)</li> </ul>	NGO포럼참가자 : 3만명
Beijing+5	2000	뉴 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3차 유엔여성특별총회로 개최</li> <li>- 북경행동강령 12개 주요관심분야 이행에 대한 검토와 평가</li> <li>- 북경행동강령 이행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추가 행동 및 조치 등 최종 보고서 채택</li> <li>- 참가규모 : 148개국 (우리대표 13명)</li> </ul>	NGO포럼참가자 : 2천여명

## II. 『북경+10』 관련 국가이행 보고서<sup>1)</sup>

### 제1부 : 양성평등과 여성능력 배양의 성과와 과제검토

북경행동강령 12개 주요 관심부문별로 우리나라의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정부가 가장 우선순위를 높이 둔 부문은 ‘H.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F. 여성과 경제’, ‘D. 여성에 대한 폭력’, ‘I. 여성인권’ 및 ‘J. 여성과 미디어: 정보통신’이며, 가장 큰 성과를 이룬 부문도 이 부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성과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년) 및 그에 따른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여성발전기금 조성, 여성부 출범(2001년),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신설(2002년), 국회 여성위원회 발족(2003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에 미칠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성인지적 정책 및 예산 분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12월에 제정되었으며, 동법에 따라 여성정책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게 되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 말 현재 총 467억원이 조성되었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은 특히 성차별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확대 기반 마련, 모성보호강화 등의 정책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시행중인 제2차 기본계획(2003~2007)은 정부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 및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의 기반조성 등 새로운 정책환경에 부응하고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해 ①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관계 형성 ②지식기반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③ 사회 각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④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강화 등의 4대 정책목표를 선정하였다.

‘F. 여성과 경제’에 해당하는 정책으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전업주부 재취업

1) 2005년 제49차 여성지위위원회 주제인 “북경행동강령과 여성특총 결과문서 이행점검”을 위해 2004년 6월 제출된 국가보고서임.



훈련, '여성신직업페스티벌' 개최를 통한 여학생 직로형태의 다원화 및 직업설계 기회 제공, 여성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 지원사업, 여성농어업인 지원,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 등이 있다.

남녀차별법령 정비사업은 조문에 남녀차별적인 성격이 있는 771건의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를 정비하였다. 특히 여성차별 철폐 부분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법제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1999년 제정), 근로기준법 (2001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2001년 개정)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률이 제 개정되고, 이들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노동위원회, 고용평등위원회가 해당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구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도 여성의 인권과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조사 및 구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2003년 말 현재 각각 5%에 불과한 여성 행정관리직 비율과 기업의 관리직 여성 비율을 감안할 때, 정부정책 및 사회 전체의 성주류화 정도는 아직까지 낮은 편이며, 법률상 여성차별철폐 분야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의 양성평등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의사결정 및 정치참여 분야에서도 각종 장려책 도입과 함께 조금씩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2004년 총선에서 선출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3%로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소수에 머물고 있다.

'D. 여성에 대한 폭력' 및 'I. 여성인권' 분야에서는 먼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례법(1994년)」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997년)」의 제정을 통해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예방하고 처벌해야 할 사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을 규제하고 「아동복지법」을 개정(2000년)하여 아동성학대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 인권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을 위한 긴급전화 1366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가정폭력·성폭력근절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성매매방지 분야에서도 2003년 6월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적인 「성매매방지기획단」을 설치하고 2004년 3월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2004년 3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성매매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등에 대한 처벌강화, 범죄로 인해 얻은 불법이익의 몰수,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확대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성매매방지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여성의 인권문제로 전환하여 통합적인 지원체계와 예방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폭력없는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기위해 ‘디지털 평등사회’ 실현이라는 정책비전에 따라 “여성정보화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여성들의 정보접근 환경을 보다 편리하게 구축하고 여성IT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여성의 정보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4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2003년)에 제출된 유엔사무총장보고서는 이러한 여성정보화에 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모범 사례로 제시하였다.

## 제2부 : 북경행동강령의 주요관심분야 이행과 제23차 특총결과 점검

### 빈곤퇴치 및 여성경제활동 참여지원

정부는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는 등 경제·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을 도입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산적 복지 개념을 도입,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빈곤 계층의 자립자활 촉진(empowerment)에도 중요성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 자녀의 학자금 지원확대, 모자보호시설 퇴소가정의 조기 사회자립을 위한 정착금 지원 등 저소득 모자 가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여성자활 활성화를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빈곤여성의 탈빈곤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빈곤여성보호 및 여성의 탈빈곤 과제를 개발 중에 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실업 증가로 인해 신빈곤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가주주의 대한 정책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서는 2000년부터 전국에 14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중이고 여성전문인력 창업활성화를 위한 여성창업강좌를 개설 운영중이다(2000년-2002년 총 380회 개최, 2만명 교육). 또한, 전업주부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창업유망직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신직업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실업계 여고생, 여대생 등 젊은 여성들의 창업마인드를 제고하고 있다.

‘일하는 여성의 집’을 전신으로 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현재 51개가 운영중이며, 연간 약 3만여명의 직업훈련수료자를 배출하고 있다. 이 밖에 2003년부터 여성발전기금에서 100억원을 조성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이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기능을 익힌 여성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 1인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을 융자하는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04년에는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여성가장창업자금 지원사업(총 30억원)을 시작하였다.

“여성 농어업인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이 농림부 주도로 2000년 10월 수립되어 시행중이며, 여성 농어업인의 생활실태, 노동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여성 농업인과 여성 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제정(2001. 12. 31.)하였다. 또한 과학기술부에서는 여성들의 잠재력을 과학기술분야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 관한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소 등에 매년 여성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권고하는 여성과학기술 채용목표제를 추진하고 있다(2007년까지 20% 달성 목표).

## 권력 및 의사결정과 여성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를 위해서 1996년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한 결과 여성합격자 비율이 1995년 27.3%에서 2002년 42.9%로 대폭 증가하였다. 2003년부터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전환하여 시행중인데, 이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어느 한 성(성)의 합격자 비율이 30%미만일 때 합격선 범위내에서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도 2006년까지 1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03년말 현재 중앙 6.4%, 지방 5.4%).

한편,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제대군인 가산점제도가 2001년 1월 8일 폐지되었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 자문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 여성위원 비율이 1999년 17.6%에서 2003년 31.6%까지 증가했고, 2007년까지 40%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 2000년에 국회의원 선거, 시·도의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처음 도입하여, 현재에는 그 비율이 50%로 되어 있다. 또한 여성후보 추천 장려책으로서 여성후보를 많이 추천한 정당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200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중 24%(11명)가,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선거구중 67.1%(49명)가 여성으로 선출되었다. 2004년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9명의 여성위원이 선출되어 여성의원비율이 이전의 5.9%에서 13%로 대폭 확대되었다.

## 여성과 교육

2002년 개정된 교육기본법은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남녀평등 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명시하였다.

1999년부터는 ‘기술·산업’ 교과와 ‘가정’ 교과를 ‘기술·가정’ 교과로 통합하는 등 양성평등한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2000년 부터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공계열별 현황에서 여학생의 상업계 과대분포, 공업계 과소분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시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것을 폐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여학생의 전공편중 현상해소 및 여성 과학인력 양성을 위하여 여학생 친화적인 과학프로그램 개발, 여학생 과학 캠프 실시, 여학생 이공계열 진학안내서인 ‘여성, 과학과 만나다’ 발간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2003년도에는 초중등학교용 양성평등한 진로지도 지침서를 마련하였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널리 알리고 있다.

1999년 8월 개정된 평생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인의 학습기회가 확대되었고, 이로써 성인 남녀간의 교육격차를 감소시키는 다양한 교육기회의 확대를 가져왔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는 초중고 여학생, 여대생, 주부 200만명 정보화 교육사업을 지원하였다.

고등교육부문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여학생(36.8%) 및 여성 박사비율(23.8%)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여성인력 활용이 부진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0년부터 여성교수 비율을 대학재정지원평가에 반영하고 국·공립대의 주요 행정조직 및 위원회에 여성교수의 참여 제고를 적극 권장해 왔다.

또한 2003년 6월 국립대학에 200명의 여성교수를 별도정원으로 배정하고, 2003년 7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하여 여성교수 채용목표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 정책 평가시에 여성교수에 대한 신규채용 뿐 아니라 여성교수가 대학사회에 진입한 이

후의 역할증대를 위한 대학의 전반적인 노력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 여성과 건강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근로 여성의 건강보호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청소년 성문제 및 미혼모의 증가, 성병과 AIDS 감염의 증가 등으로 청소년 성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남아선호로 인한 불법 인공임신중절이 사회문제화된 바 있다. 정부는 여성의 건강문제가 보건의료와 더불어 사회구조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고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대응은 물론, 사회, 교육, 환경부문 등의 범정부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임신·출산에 대한 보건서비스의 내실화를 목표로 산전진찰 관련비용의 의료보험 적용범위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임신부의 산전·후 관리 및 건강검진, 영유아의 등록 관리 및 건강검진, 모자보건과 관련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모유수유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1년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성보호관련법을 개정하여 60일이었던 산전후휴가를 90일로 연장하고 태아검진휴가를 신설하며 최고 135만원의 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등 출산과 관련한 사회적 부담을 강화하였다.

또한 청소년기 건강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무료건강검진사업 실시 등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성교육·성상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 보호청소년 성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남아선호사상에 기반한 여자아기의 선별적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태아 성감별을 불법화하고 1996년에는 태아 성감별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1회 위반 시에도 의사면허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0년에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문제와 대책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2003년에는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수준이 어떠한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통계연구를 수행하여 「한국여성건강통계집」을 발간하는 한편,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20여개를 개발하였다. 향후 매3년마다 실시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대규모 서베이(survey)에서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드러내는 건강조사 시행과 2003년에 개발된 여성건강증진 정책과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 여성에 대한 폭력

1994년 1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1997년 12월 『가정폭력처벌에관한특별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성폭력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2001년 여성부 신설과 함께 피해자보호 강화뿐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해왔다.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정폭력·성폭력근절종합대책’은 가정폭력, 성폭력의 발생단계에 따라 신고체계 접근성 강화, 수준 높은 상담서비스 제공,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시 등 7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폭력피해 여성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구호를 받을 수 있는 체계구축을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여성긴급전화 「1366」을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여성 중 인신매매·성폭력 등 피해로 전문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동시통역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2003년 12월 『성폭력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피해자가 13세미만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4년 치료와 상담을 함께 제공하는 ‘아동성폭력센터’를 설치하였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2003년 현재 12월 175개소의 가정폭력상담소를 설치하고 이중 66개소에 대해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37개소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2003년 12월 현재 115개소의 성폭력상담소를 설치하고 68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12개소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성매매는 매매자 사이의 양자관계가 아니라 폭력이 개입된 알선행위가 존재하는 3자관계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성매매와 관련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대처를 위한 노력도 최근 크게 강화되었다. 2003년 6월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적인 『성매매방지기획단』을 설치하고 2004년 3월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정부조직이 모두 참여하여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검단을 구성하였다. 특히 2004년 3월 제정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성매매알선,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등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피해여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1999년 제정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성희롱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에게 성희롱 방지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여성부는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현황점검, 교육실시 및 교육자료의 제작·지원, 성희롱 예방교육전문강사 양성·관리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성희롱을 방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법률은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여성인권

대한민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당사국으로서 1998년에 제3차와 제4차 보고서에 관한 통합심의를 받았으며, 2003년 제5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정부는 협약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예를 들어 1998년 7월에 보고서 심의과정과 평가사항에 대한 내용을 국내 민간단체와 정책전문가에게 알리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보고서 심의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CEDAW 협약 제16조 g항 가족성 선택에 관한 조항에 대한 유보를 유지하고 있는데, 가족성 선택을 허용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어 조만간 동 유보를 철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를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는데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가 인권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여성의 인권 증진 및 여성차별철폐를 위해 중요한 국가기관이다.

성차별적 관행과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되고 수차례 개정을 거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따라, 남녀차별사항의 조사·시정권고를 담당하는 남녀

차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간 나타난 운영상 약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간접적으로 남녀를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도 이를 남녀차별로 보도록 하는 간접차별개념을 도입하였고, 성희롱의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그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또한, '국제사법'을 개정(2001.4.7)하여 친족분야에 있어 남편 또는 아버지의 본국법만 준거법으로 지정하던 것을 부부 공통의 본국법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것도 법률상 남녀평등 실현 사례이다. 기타, 근로기준법 (2001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2001년 개정)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률이 제·개정되었고, 이들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노동위원회, 고용평등위원회가 해당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구제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부는 사회 곳곳에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2003년 6월 재단법인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성인지 정책분석과정, 성인지력 향상과정, 여성리더십 향상 과정 등 13개 과정을 개설해 중앙·지방공무원, 전문강사, 여성단체, 군인, 교직원을 대상으로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남녀차별 제도로는 호주제를 들 수 있다. 호주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가 구성되고 그 가(家)는 남자를 중심으로 승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상적인 가족제도이나, 현실적으로도 혼인 및 가족관계에 있어서 남녀불평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수년전부터 전개되어 왔다.

2002년 대통령선거 공약에 호주제 폐지가 포함된 것을 계기로, 2003년 5월 16일 여성부의 주도하에 정부 관련 부처와 주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고 대법원을 협의기관으로 한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이 발족되어 대규모의 홍보활동과 함께 민법 개정 작업을 시행한 결과, 2003년 11월 호주제 폐지 및 가족성 선택을 허용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4년에 새로이 구성된 국회에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후보들이 다수 진출함으로써 가까운 시일 내에 호주제가 폐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여성과 미디어

여성발전기본법, 방송법 등 법제에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성차별적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심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심의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다. 정부는 TV프로그램 광고에 대한 성차별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여성의 역할을 다양하고 공정하게 조명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차별적 관행과 의식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의식을 증진하기 위해 1999년부터 '남녀평등방송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는데, 이 상은 한 해 동안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중 평등문화 실천과 국민 평등의식 제고에 기여한 작품에 주어진다.

앞으로 PD, 작가, 광고제작자 등 미디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남녀평등의식을 제고하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여성과 환경

정부는 환경 관련 여성단체의 국내외 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여성환경 NGO 및 여성환경 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실시하고 있는 '환경살림을 위한 사이버 주부 모임' 운영, '여성환경운동가에 대한 리더쉽 교육 사업' 지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향후 환경정책의 성인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이행 모니터링 강화, 국내외 여성환경운동 네트워크 구축, 관련 연구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에는 정부의뢰로 실시된 한국여성개발원의 『환경정책의 성분석 및 성관점 통합 방안』 연구에서는 성적으로 균형 잡힌 환경담론 생산, 환경오염이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특수한 영향 고려 등 환경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여 아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이 1997년 3월 제정되고 이에 따른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000년 2월에는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기 위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연 2회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범죄 피해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피해 청소년 보호시설,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자립지원 프로그램과 전문가의 부족으로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이 절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outreach서비스를 강화하고 구출된 청소년의 탈성매매와 자립을 위해 일정 기간동안 긴급생계보호, 법적·의료지원 및 직업훈련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쉼터 및 자활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 여성과 무력분쟁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이후 인적교류규모가 확대되고 경제협력 사업이 다각화되면서 남북한 여성간 교류협력에도 의미있는 변화환경이 제공되었다. 2001년에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내에 여성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남북여성교류를 추진하였으며, 2002년 10월 16~17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여성통일대회”는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여성들이 대규모의 독자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남·북의 여성 600여명이 참가하여 6.15 공동선언의 이행과 평화를 결의함으로써 여성들이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을 도모하여 평화통일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부의 여성관련 통일정책은 여성의 통일역량확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에서 여성대상통일교육 프로그램, 남북한 여성 통합을 대비한 법·제도의 연구, 탈북여성의 남한사회적응 지원 프로그램 등 통일에서의 여성역할증대를 위한 6개 기본시책을 시행해 왔으며,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통일대비 여성역량 강화 및 참여확대”를 핵심과제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부와 여성부가 공동주관으로 여성계의 다양한 통일운동 유도 및 지원, 남북여성교류협력 증진, 통일대비 여성정책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통일과정 전반에 여성적 시각을 통합시키고, 통일문제와 대북정책관련 각종 자문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 여성과 정보통신기술

정부는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1998년부터 “여성정보화교육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2002년 현재 총 63,218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교육수료자 중 3,571명이 정보통신분야에 취업하고 231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2000년부터 2002년 6월까지 실시한 「1,000만명 국민정보화교육」을 통해 400만명 이상의 여성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기초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게임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분야와 전자상거래 분야가 여성이 취업하거나 창업하기에 유리한 분야로 보아, 이 분야에서 여성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화 교육을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등 탁아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함으로써 여성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여성부는 여성전용 공익 포털사이트인 위민넷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보호, 육아와 아동보호, 공공활동감시 및 사이버 성범죄 예방과 관련한 자생적 커뮤니티가 속속 생겨났다. 또한 사이버 여론조사나 온라인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활발히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그리고 2001년 1월에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나타나는 정보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저소득층·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의거하여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설치하고 2001년~2005년간 『정보화격차해소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 제3부 : 제도적 발전 (Institutional Development)

### A. 여성부 설립

여성부는 정부 내의 여성정책을 기획, 종합하는 행정부처로 2001년 1월 설치되었으며, 북경행동강령 및 여성특총결과문서의 국내이행을 총괄한다. 여성부 이전의 여성담당 국가기구로서는 1988년 설치된 정무장관(제2)실, 1998년 설치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있었다.

여성부의 업무 영역은 정부조직법 상 '정부 내 여성정책의 기획·종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여성정책의 조정업무, 남녀차별개선업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예방 및 보호업무, 성매매 피해자 예방 및 선도업무,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업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특히 여성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발전기본법 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정책담당 공무원 및 기업, 언론, 정당, 노동조합 등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는 차별의 철폐와 평등실현을 위한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모든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도록 하고, 잠정적 우대조치의 개발과 실시를 위하여 매우 필요한 기능이다.

이러한 여성부의 역할과 기능은 첫째,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남녀평등하게 수립되도록 정책과정을 점검·평가·분석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조직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며, 둘째, 여성인적자원을 적극 개발·활용하고, 셋째, 차별과 폭력의 철폐를 위해 정책, 교육, 피해자 보호, 권리구제 등 인권 보장기능을 하며, 넷째, 평등, 발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비정부기구, 정부부처와 협력하는 것이다.

여성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안건 제출, 심의 및 표결 참여권을 가짐으로써, 국무회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국가의 모든 주요 정책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B.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조정회의는 2002년 12월 11일 개정된 여성발전 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2003년 3월 12일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되었다. 여러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관련 업무 및 정책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조정을 담당한다. 여성정책 조정회의는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고 여성부장관이 부의장이 되며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은 당연직 의원이 되며, 기타 부처의 안전과 관련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원에 포함된다.

## C. 여성정책책임관

여성정책책임관은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기획관리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03년 5월부터 45개 중앙행정기관에 여성정책책임관이 지정되었다. 여성정책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여성정책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며,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와 해당 기관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 D. 여성정책 담당관 제도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림부, 행정자치부의 중앙 6개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성정책담당관제도는 1998년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설치 당시 해당 부처의 여성관련 업무 정책의 여성주류화 촉진을 위해 도입되었다.

2003년부터 6개 부처의 여성정책 담당관은 여성정책책임관의 지휘를 받는다.

여성정책담당관제도는 여성정책의 제도적 장치로서 여성정책의 발전에 유의미한 기

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정책담당관제도는 1999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도 모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여성정책담당관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여성특별위원회에서 2년간의 여성정책 시행을 평가한 결과, 여성정책담당관이 설치된 부처의 여성정책추진이 더 활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각 부처의 여성관련 업무가 그 부처의 주요 기능에만 관점을 두고 정책화될 때와 여성문제 의식을 갖고 여성의 상황이 고려된 여성 정책적 시각이 포함될 때의 정책을 비교해 보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 E. 모니터링 및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 여성관련 주요시책의 추진현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동 평가에 포함되는 여성관련 시책으로는 자문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성희롱 예방,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남녀평등 인사관리, 모성보호제도 강화 등 7개이며, 시민단체와 관계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 F. 통 계

성인지적 통계 생산 전담부서 지정(설치), 필수 성인지적 통계지표 생산 활성화, 성별 항목 신설, 각종 보고통계의 보고양식 개선 등 성별분리 통계생산이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참여정부 공약사항에 포함되었다. 통계청을 비롯한 통계작성이 승인된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조사통계의 조사표 문항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성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집(자료집)이 생산되고 있으나, 이는 기존에 생산된 자료를 재분석·재편집한 가공통계로서 통계의 생산과 수집과정에 한계가 있다. 이외에도 신규통계조사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1999년부터 5년 단위로 통계청에서 『시간사용조사』를 실시하여 여성의 무보수 노동을 측정해 오고 있으며, 여성부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여 전통적인 국민소득계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가계 부문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 of Unpaid Household Labor : SAUHL)' 작성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하였다.

향후 기존 통계 생산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담당자들이 남녀의 서로 다른 상황을 파악하여 성별 이슈를 개발·부각시키고, 원자료 재분석을 통하여 성별분리 부분을 보충하고 기존통계의 조사주제, 조사 설계와 진행, 조사표, 발간사항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률, 제왕절개율, 사산율 등 인구 및 건강 관련 통계, 여성가구주의 빈곤, 가족내 가구원의 역할, 이혼 관련 등 가족관련 통계, 실업 및 비공식부문 등 고용관련 통계, 보육시설과 방과 후 아동시설 등의 보살핌노동 지원시설 현황, 폭력에 대한 통계 등 사회복지관련 통계와 같이 성불평등 현상 파악 및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주요지표가 신규로 개발되어야 한다.

한편, 통계 작성 조직 및 담당자의 성 인지성 함양을 위해 성 인지적 통계의 개념과 필요성, 성 인지적 통계생산의 국제적 추세와 국내 현황, 성 인지적 통계생산 전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단계에 있다.

## G. 여성단체와의 협력

한국의 여성단체와 정부는 여성관련 법·제도 개선 노력,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여성계의 공동이슈 발굴 및 대책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협력해 왔다.

여성발전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공동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성단체의 참여확대 및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협력사업은 “공동협력사업선정위원회”를 거쳐 심사, 선정되고 평가받는다. 2003년도 공동협력사업의 경우 총 20억원의 예산으로 121개 단체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여성부의 중점추진사업인 기획과제(양성평등 가족문화, 여성폭력근절, 성비불균형해소, 여성건강증진, 호주제도 개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87개 (13억 6천만원)와 각 단체의 고유사업을 포함하는 일반과제 34개 (6억 4천만원)가 선정되었다.

## 제4부 : 주요 장애와 그에 대한 대응조치

현재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법제도상의 평등을 어떻게 실제적인 평등으로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주류화 되지 못한 채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으로 밀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남녀평등을 목표로 하는 여성정책은 경제, 인권, 정치, 문화등과 깊이 관련되므로 여성문제가 주변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요 국가정책영역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주류로 다루어져야 한다. 향후 여성정책을 주류화하여 여성을 사회발전의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①보호·시혜대상으로서의 여성정책이 아닌 능동적, 주체적 여성을 위한 정책, ②생애주기별, 분야별 다양하고 전문화된 여성정책, ③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 파트너쉽을 위한 성인지적 정책, ④성차별개선 뿐만 아니라 여성인력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정부예산의 성인지적 편성도 취약한 분야 중 하나로, 직접적인 법적근거 규정은 없으나 국회는 공공정책에 양성평등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2002년 11월 8일 본회의에서 정부의 '성인지적예산편성및자료제출촉구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참여정부도 '양성평등 예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왔다. 성인지적 예산분석은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양성평등한 정책 또는 사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성 평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도구이나 구체적인 추진방법 및 전문가 부재, 연구실적 등이 미비하여 아직까지는 성인지적 예산분석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적 예산편성 현황 파악을 추진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2003년에 외부전문가 간담회 및 6개 부처 여성정책담당관 회의를 통해 본제도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성인지적 예산분석지침 수립방안'에 대한 기초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성인지적 예산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양성평등 파급효과가 큰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4개 부처의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예산편성에 대한 성인지적 시범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시범분석 결과와 2004년 성별영향평가 시범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성인지적 예산편성 내용이 반영되도록 여성부가 중심이 되어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북경행동강령 및 여성특총 결과문서의 국내이행을 책임지는 여성정책담당 국가기구인 팔목할만한 성장을 보여 왔으나, 인력·예산 등의 한계로 인한 여성정책의 총괄·조정역할의 한계,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권한과 지위의 향상에 따른 반발로 인한 일부 남성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적 정서의 확대 등이 여성부가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국가기구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즉,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잔존, 권력 및 의사결정직에의 여성참여부진, 여성관련 예산의 부족, 여성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및 교육 부족 등을 이행의 장애요인으로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잔존, 권력 및 의사결정직에의 여성참여부진, 여성관련 예산의 부족, 여성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및 교육 부족 등을 이행의 장애요인으로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43차 여성지위위원회(1999)에서는 여성정책 국가기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임무, 가능한 최고 지위, 책임성, 시민사회와의 동반자 관계, 투명한 정치적 과정, 충분한 재정적·인적 자원, 강한 정치적 후원이 매우 중요함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국가기구의 역할 및 위상 강화 노력에서 이런 점을 적극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부가 여성발전만이 아닌 양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사회를 적극 실현해 나가는 국가기구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정부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여성 인적자원 개발·활용을 통하여 여성 스스로 권익과 지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며, 정부 부처간 정책조정·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국가차원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북경행동강령의 12개 주요 관심분야 중에서는 'K. 여성과 환경', 'L. 여아' 등이 향후 보다 활발히 추진되어야 할 분야이다.

주제 I : 『북경+10』 성과 및 평가

## 아태지역의 성과 및 평가

이 선 주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아태지역의 성과 및 평가

2005년은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북경선언과 행동강령이 채택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4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성과와 평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 회의에 앞서 2004년 9월7일부터 10일 사이 태국의 방콕에서 북경선언과 행동강령 이행에 대한 점검을 위한 아태지역 정부간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었다.

북경선언은 행동강령이 여성의 힘을 증진하기 위한 의제이며, 양성평등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로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며 평등, 발전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전제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조)<sup>2)</sup>. 이 선언을 바탕으로 북경여성대회에서 12개의 주요관심 분야가 채택되었다. 1995년 이후 지난 9년간 12개의 주요관심 분야에서의 획득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치·사회·문화적인 제약과 가시적·비가시적인 성차별로 인하여 여성의 힘 증진을 통한 양성평등의 달성에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북경대회 이후 급속히 진행된 세계화로 인하여 국제 정치·경제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성(gender)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다. 세계화는 시공간을 횡단하는 세계적 사회관계의 형성을 의미하며, 지리적으로는 서로 다른 지역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지구의 확대 과정이다<sup>3)</sup>. 광범위한 경제적·기술적인 변화가 세계화의 주요한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외적으로 인구의 이동을 수반하고 있어 새로운 국제도시의 성장과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낳고 있다<sup>4)</sup>. 이 현상은 세계경제구조의 재편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 미숙련 여성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임금이 낮아져 빈곤화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ICT)의 성장으로 숙련된 여성근로자들이 ICT분야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도 한다<sup>5)</sup>.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세계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일률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세계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이와 동질성은 부문간 접근(intersectional approach)을 통하여 이해가 가능할 것이

2)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Platform for Action [www.un.org/womenwatch/daw/beijing/platform/plat1.htm](http://www.un.org/womenwatch/daw/beijing/platform/plat1.htm)

3) Giddens, Anthony (2002), 'The globalizing of modernity', in D. Held (ed.), *The global transformations reader: an introduction to the globalization debate*, 2nd edition, Polity, Oxford, p. 60.

4) Pearson, Ruth (2000), Moving the goalposts: Gender and globalis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Gender and Development*, Vol.8, No.1. pp. 10-19.

5) Wably, Sylvia (2000), Gender, globalisation, and democracy, *Gender and Development*, Vol.8, No.1. pp. 20-28; Pearson, 위의 논문.

다. 부문간 접근은 사실상 계급, 계층, 인종, 민족, 연령, 종교, 언어, 장애의 유무, 이주/난민의 지위에 의해 형성되는 여성의 다중적인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는 다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복잡 다양한 형태의 성차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횡단하여 발생하는 여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가 성으로 인한 차별(gender-based discrimination)과 인권침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북경선언과 북경행동강령이 추구하고 있는 여성의 힘 기르기와 양성평등 정신에 위배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이 글은 첫째, 아태지역이 지난 9년 동안 이룩한 북경행동강령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문제와 새로이 출현하고 있는 문제들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아태지역 양성평등정책의 향후 발전방향을 위해서 성 주류화 및 주요 접근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1. 북경행동강령의 성과와 과제

북경 세계여성대회가 개최된 이후 많은 국가에서 여성의 힘 증진과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우선, 제도적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기구를 설치하였다. 여성의 재생산과 모성보호와 관련된 권리의 증진과 더불어 기대수명이 연장되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적극적 조치의 도입과 실시를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가 향상되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초등교육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그로 인한 문맹률도 감소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여성의 힘 증진을 위한 소규모 대부프로그램과 소득창출활동 등이 확대되었다. UNESCAP<sup>6)</sup>은 이러한 점들이 바로 아태지역에서 북경행동강령의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함께 한편으로는 북경행동강령을 이행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정치·사회·문화적 보수성과 일상생활에 깊숙이 뿌리박혀있는 가부장적인 사고는 북경행동강령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협약(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sup>7)</sup>)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주요 장애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북경행동강령이 채택된 이후 아태지역의 많은 국가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성차별을 제거하고 여성의 인권을 향상하고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법·제도

6)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

7) 이후는 CEDAW로 표기함.

적 변화를 꾀하였다. 실질적으로 아태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런 법률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적인 관습과 규범은 아직도 다양한 형태로 현존하고 있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시민권, 정치권, 사회권, 경제권, 문화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법률상의 평등만이 아니라 남녀의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인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북경선언과 행동강령이 추구하는 사회적 정의 실현과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는 지난 9월 개최된 아태지역 정부간 고위급 회의에서 논의된 12개 주요관심 부문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sup>8)</sup>. 분야별로 그 성과와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북경 행동강령의 의제인 여성의 힘 증진을 위해 앞으로 전력해야 할 부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 여성과 빈곤

아태지역에서 빈곤감소는 대부분 국가들의 정책적인 주요 관심분야 중의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1.3조의 인구가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 700백만이 아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sup>9)</sup>. 이 700백만의 빈곤 인구 중 대다수가 여성이다. 아태지역에서 여성빈곤에 대한 통계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지만, 여성빈곤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10)</sup>.

아태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는 빈곤의 감소를 위하여 소규모 대부 프로그램과 공공 사업, 기술향상 지원프로그램과 사회적 안정망 구축으로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 대부프로그램은 빈곤한 여성을 위한 의료시설, 교육, 직업훈련과 기술향상지원 등과 같은 다른 서비스와 함께 시행되고 있다. 여성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소규모 대부 프로그램(micro-credit programmes)으로 방글라데시의 그라멘 은행(Grameen Bank)이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 은행은 1976년 방글라데시의 조브라(Jobra)에서 시작한 것으로 빈곤계층, 특히 여성에게 담보나 보증인이 없

8) 'Review of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nd its Regional and Global Outcomes(E/ESCAP/BPA/1)',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High-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 to Review Regional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nd Its Regional and Global Outcomes,7-10 September 2004, Bangkok ; 'Technical papers (Review of Regional Implementation of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nd its Outcome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High-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 to Review Regional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nd Its Regional and Global Outcomes,7-10 September 2004, Bangkok; 'Implementation Gaps and Challenges Ahead in the Escap Regio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High-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 to Review Regional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nd Its Regional and Global Outcomes,7-10 September 2004, Bangkok를 참조하였음.

9) 'Implementation Gaps and Challenges Ahead in the Escap Region', para 4.

10) 'Review of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nd its Regional and Global Outcomes(E/ESCAP/BPA/1)', para 16.

이 대부를 하고 있다. 대신에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일정 집단에 소속되어 그 집단의 모니터링 속에서 대출금을 은행에 갚는 것이다. 그라멘 은행은 현재 1,229개소의 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대출 받는 이들의 96%가 여성이다<sup>11)</sup>. 그라멘 은행은 문맹인 여성들이 소규모의 자본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남성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로 금융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성 인지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아태지역에서 발생하는 무력분쟁과 HIV/AIDS로 인한 남성 사망률이 증가하면서 여성가구주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2)</sup>. 이 여성가구주들의 대부분이 빈곤 속에 있다는 사실이 주목되고 있다. 빈곤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도 가족 구성원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이 체감하는 빈곤은 다른 가족구성원들 보다 크게 나타난다. 남아시아, 중국,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성과 식량안보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국가의 식량지원이 삭감되면서 식량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심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농촌가구로 지적되고 있으며, 가구 내에서도 여성과 여아의 식량소비량이 감소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sup>13)</sup>. 따라서 빈곤감소를 위한 정책 수립과 빈곤구제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가구 안에서 성인남녀와 소년·소녀에 대한 자원의 분배와 빈곤에 대한 경험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

## ● 여성의 교육과 훈련

아태지역 여성의 문자율이 1990년 80%에서 2000년 87%로 증가하였다. 이는 아태지역에서 여성의 문맹률이 감소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의 문맹률감소에는 중국의 기여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4)</sup>. 북경행동강령이 제시하는 여성의 교육과 훈련은 새천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제시하고 있는 2015년까지 모든 소년·소녀의 초등교육과정 이수 보장(세부목표 3)과 2015년까지 모든 교육과정에서의 성별차이 근절(세부목표 4)의 목표달성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여성의 문맹률 감소와 함께 고등교육의 진학률이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바로 여성의 자율성 증진과 교육에서의 성별차이의 제거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이 받는 교육내용이 앞으로의 취업과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과 여아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는 것은 자원의 부족만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성취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결여와 지역의 무력분쟁으로 인

11) [www.grameen-info.org](http://www.grameen-info.org)

12) Technical papers.

13) 'Implementation Gaps and Challenges Ahead in the Escap Region', para 6.

14) Technical papers.

한 사회적 혼란 때문인 경우가 많다. 무력분쟁과 반란이 빈번한 곳에서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성적 유린과 폭력을 방지하기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혼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교육받을 기회가 더 축소되기도 한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남녀차별적인 전통적 사고는 여성의 교육과 기술훈련참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하는 정치적인 의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 여성과 건강

대부분의 국가가 일차 진료에 필요한 의료시설 제공에 있어서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으나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는 아직도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아태지역의 많은 나라에서 여성의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으나 산모 사망률은 아직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네팔은 100,000의 출생 당 740명의 산모가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인도는 540명, 라오스는 65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5)</sup>. 새천년발전목표의 세부목표 6은 산모 사망률을 1990-2015년 사이에 3/4로 감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 관습과 규범이 장애요인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최근 아태지역에서 매 1분당 2명이 HIV/AIDS에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HIV/AIDS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전반적으로 깊게 나타나고 있다<sup>16)</sup>. 여성의 성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전통적 관습으로 인해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콘돔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어서 여성의 감염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여성의 HIV/AIDS 감염률 감소는 적절한 성교육, 재생산교육, 콘돔에 대한 접근성 증가를 포함한 성 인지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하게는 여성의 HIV/AIDS 감염방지는 이들의 경제적 힘을 키우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 ● 여성에 대한 폭력

아태지역의 국가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하고, 피해 여성을 위한 의료 및 기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공·사영역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관습과 규범이 법적 변화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폭력은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여성들이 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비난을 받게 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5) Technical papers, para 57,

16) 'Implementation Gaps and Challenges Ahead in the Escap Region', para 17.

이러한 가운데서도 한편으로 데이트 중의 강간이나 혼인 내의 강간도 역시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한 형태로서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2002년 네팔의 경우 혼인 내 강간을 범죄로 판결하여 CEDAW가 명시하고 있는 여성의 인권신장과 헌법에 반하는 행위로 보았다<sup>17)</sup>.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은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남녀가 평등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북경행동강령과 CEDAW의 권고에 따라 아태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하고자 노력하지만, 근본적으로 사회적 관습과 규범의 변화 없이는 이것을 성취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의 도입만이 아니라 실제로 법이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의 조성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의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해 질 것이다.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신매매와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는 서로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의 1/3이 메콩강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sup>18)</sup>. 국제적으로 인신매매된 여성들은 성적인 착취와 폭력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 여성과 무력 분쟁

아태지역에서 인도네시아, 네팔, 아프카니스탄, 필리핀 등이 무력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02년 말에 여성난민 수가 1.3백만명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기구와 NGO와의 협력으로 이들을 위한 구제품을 조달하고 주택을 공급하였다. 특히 NGO는 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훈련과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들의 힘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한편 유엔에 따르면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 참여는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9)</sup>. 이것은 여성과 무력분쟁의 문제에 성인지적인 관점을 통합하는 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분쟁해결을 위한 협상과 재건과정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태지역의 소수의 국가만이 제네바협약과 그에 따른 부속 의정서에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무력분쟁 상황에서 여성의 인권침해가 인도적인 원칙에 준하여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0)</sup>. 그리고 무력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 조치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분쟁과 갈등 상황에서 여성의 인권의 어떻게 침해당하고 유린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부

17) Technical papers.

18) 'Implementation Gaps and Challenges Ahead in the Escap Region', para 17과 para 24.

19) 위의 논문, para 17과 para 25.

20) 위의 논문.



각할 수 있는 기구로 평가되고 있다<sup>21)</sup>.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여성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적인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 ● 여성과 경제

1990년 이후 아태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경제활동의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남녀의 임금격차가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그 격차가 현존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계화가 여성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는 여성의 고용형태 변화와 노동조건 악화가 두드러진다<sup>22)</sup>. 첫째,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여성이 비공식부문에 참가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시간제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경제자유화조치와 세계무역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저숙련 여성근로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농업과 섬유산업 분야가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 분야의 기업들은 생산비용 절감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약 계층의 여성을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전제로 고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재택근무(home-based work) 가능성 확대이다. 재택근무는 출퇴근 없이 가정에서 가구의 소득증대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선호하는 일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이들에게 부여되는 노동권과 사회권이 극히 제한되고 임금수준이 낮다는 점에서는 재택근무의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재택근무만이 아니라 위에 열거된 고용형태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노동권과 사회권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거나 기존의 것을 축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권과 사회권 보호를 위한 각 정부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세계화 속에서 여성의 노동권과 사회권이 축소되는 상황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에게 새로운 취업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인도에서는 ICT분야에서의 여성의 경쟁력 강화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직 여성에게 제공되는 고용조건이 향상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국제무역협상 과정에 여성의제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태지역의 대부분의 국가가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과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회원 국가이다. 이들 국가들이 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여성의 권리문제를 의제에 포함하여 여성의 노동권과 사회권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sup>23)</sup>.

---

21) Technical papers, para 87.

22) Review of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nd its Regional and Global Outcomes(E/ESCAP/BPA/1).

23) Technical papers, para 99.

## ● 권력과 의사결정에의 여성참여

아태지역에서 입법기관과 관리직에 여성의 진출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국가별 편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 9%의 비율을 보이는 반면 피지와 필리핀은 각각 51%와 5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sup>24)</sup>. 아직도 성 차별적인 사회·문화 규범과 관습이 여성의 정치와 행정참여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는 여성의 입법기관과 관리직 진출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방글라데시, 터키, 한국에서는 할당제의 실시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할당제를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의 확대는 단순히 권력과 의사결정에의 참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부장적인 사고의 변화에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 ●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기구)

대부분의 국가는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다. 제도적인 장치의 강화는 주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의 개정 또는 제정으로 나타났다. 여성정책담당기구의 설립은 주요한 성과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담당기구는 행정부 내의 다른 부처나 부서에 비해 인적자원과 재정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정책담당기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은 양성평등정책과 성 주류화 전략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성별분리통계 부족과 성과 발전 정책의 이행정도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여성정책담당기구가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각 정부는 적절한 예산 배정과 활용 가능한 자원의 배치로 여성정책담당기구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산은 공공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증가하고 성 인지적인 관점을 국가의 발전에 통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성 인지적인 관점을 예산 책정 과정에 통합하는 것은 이와 관련된 조직이나 개인이 책무성을 갖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 예산과 함께 성 감사 역시 중요하게 실시될 부문이다.

## ● 여성의 인권

1995년 이후 유엔은 국제인권선언문, 결의안, 문서에서 여성인권보호의 중요성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으로 사회적 자원이 분배되고 서비스가 전달되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국가의 책임이었던 자원 분배와

24) 위의 논문.

서비스 전달이 점차 시장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시민권, 노동권, 사회권이 축소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협약과 결의안과는 다르게 경제정책의 방향이 설정되고 있음은 주목할 점이다.

아태지역에서 여성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변화가 있었다. 한국과 일본에서 CEDAW에 준하여 성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네팔은 제11차 민법의 개정을 통해 이혼여성과 미망인의 상속권을 강화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였다.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법적 변화는 여성운동과 국제단체와의 연대 속에서 이루어졌다. 아태지역에서의 2/3 국가가 CEDAW에 비준하였지만, 그 중의 많은 국가들이 유보조항을 첨가하였으며 선택의정서에 비준하지 않거나 서명하여 법률로 발효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5)</sup>.

한편 인신매매된 여성과 아동 보호를 위해서 2002년 성매매를 위한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남아시아 지역협력 협약(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Tracfficking Women and Children For Prostitution)이 만들어졌다<sup>26)</sup>. 이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적인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 ● 여성과 미디어

주류의 미디어계에서 여성의 위치는 다른 산업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큰 차이가 없다. 즉 미디어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보다 낮으며, 성역할 고정화로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이미지는 거의 변화가 없다.

반면 ICT의 활용으로 새로운 형태의 대안적인 e-저널이 만들어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지구적·지역적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여성의 로비활동이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은 ICT 발전의 긍정적인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포르노와 인신매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정부의 대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 여성과 환경

지속적인 인구성장으로 식량자원과 수자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도시중심의 발전으로 아태지역의 대부분의 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세계화는 전통 식물과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허브를 종자은행에 보존하고자 하는 여성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25) 위의 논문.

26) Technical papers, para 135.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태지역의 정부들이 자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 중심의 환경관리체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 ● 여아

아태지역에서 남녀차별에 근거한 유아살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여아가 영양 부족과 권리박탈을 경험하고 있다. 아태지역에서 여아의 유급/무급의 노동참가로 인해 학교 중퇴율이 남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포르노와 성매매와 같은 성적 착취를 위하여 여아를 매매하는 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인신매매된 여아는 HIV에 감염되는 위험에 노출될 뿐만이 아니라 재생산 기능과 관련된 다양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태지역의 정부는 법적 조치와 프로그램을 통해 여아의 권리문제를 중요시 다루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여아의 조혼을 금지하고 이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가족지원정책이 여아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문제와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문제

북경행동강령의 12개 주요부문의 성과와 과제 속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문제점과 새로이 출현하고 있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래는 그 중에서도 중요시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 ● 세계화와 여성이주

1999년 UNESCAP의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에 관한 점검에서 여성 이주근로자의 인권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여성 이주의 형태는 국경을 넘는 국제적 이동과 농촌에서 도시로의 국내적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시아지역에서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성의 이주가 남성의 이주 보다 일반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여성은 비공식 부문의 가사노동과 유흥산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어 노동권과 사회권을 보호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근로자를 파견하는 국가만이 아니라 이들을 받아들이는 국가도 이주근로자에 대한 협약(the Convention on Migrant Workers)에 비준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 ● 세계화와 여성고용

세계화는 ICT분야에서 여성의 고용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주변화되는 문제점을 낳기도 한다. 아태지역에서 발전을 위한 지출지향의 산업정책은 여성의 쉼 노동력과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보호가 적고 저임금의 재택근무나 비공식부문에 집중 고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시간제 노동과 계약직에의 종사가 늘어나고 있어 고용의 형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 여성에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 여성가구주 수의 증가

이미 앞에서 여성과 빈곤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았지만 아태지역 차원에서 여성 빈곤에 대한 적절한 통계는 아직 부족하지만, 개별국가 차원에서 여성가구주 수의 증가로 여성빈곤의 증가 상황을 알 수 있다. 2000년도 스리랑카의 경우 여성 가구주가 매 다섯 가구당 한 가구로 나타나고 있다<sup>27)</sup>. 이들 여성가구주의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과 함께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 ● 여성인신매매

1999년 UNESCAP의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에 관한 점검에서 여성 이주근로자와 함께 여성인신매매 역시 주요 문제로 등장하였다. 아태지역에서 약 200,000-225,000명의 여성과 아동이 매년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 인신매매의 1/3에 달하는 수이다<sup>28)</sup>. 세계화로 과거보다 인구의 이동이 수월해 진 반면, 엄격해진 선진국의 이민법은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업의 성장으로 이어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인신매매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인간이 매매됨으로써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할 자유와 존엄성이 침해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과 아동은 노동착취와 성적 착취를 당하고 있어 인권유린의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다.

27) Osteria, Trinidad S. (2003), 'Assessment of the progress of national machineries for gender equality in the ESCAP reg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of Action: critical issues and concerns', Regional Meeting of National Machineries for Gender Equality in the Asian and Pacific Region: Toward a Forward Looking Agenda, Seoul, Republic of Korea 12-14 November 2003.

28) Osteria, 위의 논문.

## ● HIV/AIDS의 확산

HIV/AIDS 확산 문제가 지속적인 발전과 빈곤감소를 저해하는 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HIV의 확산은 남녀간의 힘의 불균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권문제와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아태지역에서 여성 HIV/AIDS 감염자 수는 남성의 수 보다는 적지만, AIDS에 감염되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9)</sup>.

## ●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가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지면서 아태지역에서 많은 나라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시행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 여아의 노동

2000년 전 세계적으로 아동 6명 중 1명은 유급 또는 무급의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중 약 49%가 여아로 나타나고 있다. 여아의 경제활동의 특징은 남아보다 첫째 어린 나이에 경제활동에 참가하며, 둘째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며, 셋째 비공식부문에서 종사하기 때문에 노동착취와 학대를 당하기 쉽다는 것이다<sup>30)</sup>.

## ● 여성의 노령화

아태지역의 많은 나라에서 인구의 고령화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수립 또한 요구되고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장수함으로써 여성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를 위한 법적인 조치는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여성노인인구의 증가는 앞으로 빈곤문제와 함께 심각히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

29) UNAIDS의 보고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의 HIV 감염자의 23%가 여성으로 추산되고 있다. Technical papers 참조할 것.

30) Osteria, 위의 논문 재인용.

### 3. 향후 양성평등정책의 방향

지난 아태지역 정부간 고위급회의에서 아태지역에서 북경행동강령이 이행될 수 있는 합법적인 환경 조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경행동강령을 이행하는 데는 넘어야 할 높은 장벽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이러한 장벽을 넘어서 북경행동강령이행의 진척을 촉진하기 위하여 UNESCAP는 성 주류화와 함께 ① 권리에 기초한 접근(a rights-based approach), ②남성과 더불어 일하기(working with men), ③지역협력이 포함된 파트너십(partnership, including regional cooperation)의 세 가지 접근을 제안하였다<sup>31)</sup>. 성 주류화 전략의 강조와 더불어 제안된 세 가지 접근법은 향후 아태지역에서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접근방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4차 세계여성대회는 성 주류화를 양성평등을 성취하기 위한 세계적인 전략으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에 대한 점검에 있어서 성 주류화에 대한 정책적 강조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경선언은 남녀의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제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성 주류화는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관계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전략이다. 1997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성 주류화를 법, 정책,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행동계획에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정책적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 속에는 지구적 차원, 지역적인 차원, 국가적 차원을 불문하고 성을 제도화하여 모든 정책의 입안 과정에 일정한 한 성만이 아니라 양성(性)의 관점과 이해를 함께 반영하여 이것의 정책적인 효과가 경제·사회발전에 나타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둘째,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권리에 기초한 접근은 국제인권조약과 유엔시스템 안에서 다루는 인권문제에 여성의 권리를 주류화하기 위한 것이다. 북경행동강령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가 인권으로서의 여성의 권리 신장으로 CEDAW가 추구하는 목표와 같은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권리에 기초한 접근법의 커다란 장점은 아태지역의 종교와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성평등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셋째, 양성(性)이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더불어 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북경행동강령은 공·사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권력분배와 책임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남녀가 함께 일하는 사회에서는 성역할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성별분업이 사라지고 불평등한 남녀의 권력관계가 변화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여성이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성 주류화 과정에 남성의 전적인 참여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널리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확산될 때 남녀 모두가 발전으로 발

31) Approaches for creating and sustaining an enabling environment for gender equality (E/ESCAP/BPA/3).

생하는 이득과 혜택을 공동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태지역의 문화·종교·정치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세계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성에 대한 공통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태지역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유지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의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 파트너십의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지역협력은 정부, 정부간 기구, 시민사회, NGO, 사기업이 포함된 사적부문이 구성원으로 포함될 수 있다. 파트너십을 근간으로 한 지역협력은 목표설정, 정책입안, 자원의 배치,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광범위한 제도적인 변화를 위한 것이다. 북경행동강령의 제26조는 비정부기구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법과 기구의 도입에 중요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각 정부는 비정부기구와 함께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가 여성의 힘 증진을 의제로 하고 있는 북경행동강령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정부간 기구들로 구성된 지역협력체는 여성운동단체와 기타 NGO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여성정책담당기구를 강화하고, 성 인지적인 정책의 입안과 정책결정을 도모하기 위한 성 주류화 전략의 실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아태지역 양성평등정책의 방향은 북경행동강령이 제시하고 있는 12개의 주요관심분야에서의 제도적·실제적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성 주류화 전략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권리에 기초한 접근, 남성과 더불어 일하기, 지역협력이 포함된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다. 이들 세 접근법은 내용적으로 실천적으로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성 주류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성 주류화와 이 세 접근법에 대한 강조에는 양성평등의 성취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제·사회발전을 가능하도록 하고 사회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고자 하는 북경선언의 취지에 부합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Giddens, Anthony (2002), 'The globalizing of modernity', in D. Held (ed.), *The global transformations reader: an introduction to the globalization debate*, 2nd edition, Polity, Oxford.

Pearson, Ruth (2000), Moving the goalposts: Gender and globalis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Gender and Development*, Vol.8, No.1. pp. 10-19.

Wably, Sylvia (2000), Gender, globalisation, and democracy, *Gender and Development*, Vol.8, No.1. pp. 20-28.

Osteria, Trinidad S. (2003), 'Assessment of the progress of national machineries for gender equality in the ESCAP reg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of Action: critical issues and concerns', Regional Meeting of National Machineries for Gender Equality in the Asian and Pacific Region: Toward a Forward Looking Agenda, Seoul, Republic of Korea 12-14 November 2003.

'Review of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nd its Regional and Global Outcomes(E/ESCAP/BPA/1)',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High-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 to Review Regional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nd Its Regional and Global Outcomes, 7-10 September 2004, Bangkok.

'Technical papers (Review of Regional Implementation of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nd its Outcome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High-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 to Review Regional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nd Its Regional and Global Outcomes, 7-10 September 2004, Bangkok.

'Implementation Gaps and Challenges Ahead in the Escap Regio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High-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 to Review Regional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nd Its Regional and Global Outcomes, 7-10 September 2004, Bangkok.

'Approaches for creating and sustaining an enabling environment for gender equality (E/ESCAP/BPA/3)',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High-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 to Review Regional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nd Its Regional and Global Outcomes, 7-10 September 2004, Bangkok.

'Report of the high-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 to review regional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nd its regional and global outcomes (E/ESCAP/BP/Re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High-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 to Review Regional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nd Its Regional and Global Outcomes, 7-10 September 2004, Bangkok.

[www.un.org](http://www.un.org)

[www.ifad.org](http://www.ifad.org)

[www.grameen-info.org](http://www.grameen-info.org)

주제Ⅱ : 향후 여성정책 과제

## 『북경+10』 이후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과제

김 양 희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이 글에서 필자는 북경회의 이후 유엔의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정책의 성 주류화 차원에서 시도해 온 바를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당면 현안을 검토하며, 향후 성 주류화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그 궁극적인 목표인 성평등 실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때 평가부분은 이번 포럼의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성과와 평가에 대한 발제문에서도 부분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인 평가만 간략히 하고 향후 성 주류화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과제에 집중하기로 한다.

## 1. 성 주류화의 배경 및 핵심 내용

먼저 성 주류화의 배경 및 의미를 간략히 정리해 보자. 1995년 북경회의에서 성 주류화를 여성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채택한 것은 종전의 전략들이 성평등 실현을 증진하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였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소외된 여성을 위하여 (WID식의)특별 프로젝트들을 수행하였고, 물론 이를 통하여 여성들의 문제를 경감시키고 사회에 알리게 되었으며 여성단체들을 결집하는데 기여하는 등,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자체만으로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성평등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sup>32)</sup>. 발전과정에 여성을 통합시킴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동등하게 끌어올리려던 시도(GAD식의) 역시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여성을 부가적으로 고려하는 식으로 되면서 별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Hannan, 2003). 그에 따라 ‘정책과 프로젝트의 기획 초기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고 정책 시스템 전반을 전환하기 위한 성 주류화 패러다임’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주류화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듯이 젠더 관점을 부가적(added-on)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책의 목표와 전략과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초기 기획단계에 개입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성 주류화는 모든 영역에서 젠더 접근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와 전략에 초점을 둔다. Corner(1999)는 여성정책을 특정 분야 위주로 보던 시각을 탈피하여 모든 분야의 정책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것을 중시하는 주류화의 과정에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 여성의 주류화 (Mainstreaming of Women): 이는 정치적인 문제로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성들도 물성적(gender-blind)일 수 있으므로 여성의 주류화가 젠더 관점의 주류화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젠더 관점의 주류화를 위한

32) 이 부분은 김양희외(2001).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세미나] 자료집, 한국여성개발원 참조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젠더 관점의 주류화 (Mainstreaming of Gender): 이는 보다 기술적인 측면으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어떻게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고 젠더 관점을 통합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여성의 주류화와 젠더 관점의 주류화는 상보적이며, 나라에 따라 각각에 대한 강조가 다를 수 있다. 여성이 정치 및 법 분야에서 거의 배제되어 있는 나라의 경우 젠더 분석은 기존의 주류를 변화시키고 여성을 의사결정지위로 진입하게 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Corner, 1999).
- 주류의 전환(Transforming the Mainstreaming): 주류의 젠더 구성을 바꾸는 과정은 반드시 주류 자체의 특성과 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Corner, 1999). 이는 남성 중심의 주류 영역이 재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는 노르웨이의 한 정치가가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파이 몇 쪽을 나누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파이 만드는 방법을 바꾸어 보자는 것”이라고 말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Hannan(2003)은 주류화의 핵심요소로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초기의 개입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다.

- 초기에 개입: 정책의 초기 단계에 개입하여 목표와 전략, 자원배분에 영향 미침
- 젠더 관점에 대한 명백한 관심(explicit attention)
- 전환적 과정: 젠더관점의 통합으로 정책의 목표나 전략 등 뿐 아니라, 정책 결정의 구조, 과정, 문화가 바뀌는 것

주류화를 위한 첫 번째 작업은 특정 정책과 성평등의 연계를 측정하는 것, 즉 정책 현안과 관계되는 젠더 이슈를 확인하는 것이다. 예컨대, 농업인육성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왜 성평등 증진이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작업은 젠더 관점을 소개할 기회(즉, 진입지점, entry points)를 탐색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지침 개발, 성 인지적 통계, 담당자 성 인지력 향상 기회 제공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 2. 한국의 성 주류화에 대한 총괄 평가 및 발전 과제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이후 성 주류화를 여성정책의 기조로 표방해 왔다<sup>33)</sup>. 그러나

33) 한국의 여성정책 기조에서 본격적으로 ‘주류화’를 표방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

그동안 추진해 온 여성정책의 대부분은 사회의 남녀관계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성 평등을 이루려는 전략적 요구(strategic gender needs)(Molyneux, 1985: 233)<sup>34)</sup>를 충족시키기보다는 다분히 여성을 위한 특별조치의 성격을 띠는 것, 그리고 여성이 전통적으로 맡아 온 역할로부터 발생하는 요구(실제적 요구, practical gender needs)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소위 WID접근에 의한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여기서는 주류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발전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가. 성 주류화의 제도적 기반

### 1) 여성정책기구

북경행동강령의 조항<sup>35)</sup>은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기구는 모든 정책 분야에 젠더 관점을 주류화 하는 범정부적인 주류화 작업을 지원하는 것을 중심 과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 주류화를 위한 핵심 정책 기구에는 여성부와 여성정책조정회의, 각 부처의 여성정책책임관, 6개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실, 국회여성위원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기구들이 있다. 한국의 성 주류화 작업이 어느정

---

회의 여성정책 추진방향과 업무에서부터였다. 동 위원회는 여성정책이 국가정책의 핵심분야로 다루어지도록 주류화 시킨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그전까지의 여성정책에서 피해자 또는 결핍집단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복지를 강조하여 여성정책이 주변화되어 온 성격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34) Molyneux(1985)는 젠더요구를 실질적 요구(practical needs)와 전략적 요구(strategic needs)를 구분하여 젠더 기획의 기초개념을 제공하였다. 실질적 젠더요구는 단기적이며 즉각적인 요구로서, 전통적인 성역할에 의해 규정된다. 이러한 요구가 충족된다고 해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관계가 개선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상수도나 가족의 건강을 위한 서비스, 모성보호나 육아시설 등에 대한 요구가 이에 포함된다.

반면, 전략적 젠더요구는 여성의 종속적 지위에 대한 분석에 기반 하여 그와 같은 종속적 위치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시스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전략적 요구는 종종 비전통적 성역할과 관련되어 있으며,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별분업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나 동일 임금, 여성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 등의 이슈를 다루게 되며,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부담 경감, 재산의 소유권이나 신용에 대한 접근권, 정치에서의 평등 등과 관련된 요구를 포함한다(p.233).

이같이 젠더요구를 구분하는 이론의 유용성이 인정되는 반면, 페미니스트들 중에는 이 같이 젠더 요구를 이원화하는 것이 위계를 전제하며, 개인적인 요구와 정치적인 요구,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여성적인 것과 여성주의적인 것을 지나치게 양분화 한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사실 여성들이 실질적 젠더 요구를 위해서 조직적인 활동을 하다보면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문제를 구조적으로 보게되고, 전략적 젠더요구를 갖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젠더요구는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Peterson & Runyan, 1999. *Global Gender Issues*. Oxford: Westview Press). 여성은 때에 따라 다중적인 실질적 젠더 요구와 다중적인 전략적 젠더 요구를 함께 가질 수 있으므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35) 'A national machinery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is the central policy coordinating unit inside the government. Its main task is to support government-wide mainstreaming of a gender equality perspective in all policy areas.'(북경행동강령 조항 207)

도 실천되고 있는지 보기 위하여 주류화의 촉매자로서 여성부의 기능과 역할, 다른 기구들과의 협조체계, 그리고 각각의 기구들이 보유한 자원과 수단에 대해 논의와 점검이 필요하다.

#### 가) 여성부

2001년 1월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부처로 여성부가 신설되었다. 여성부는 가정폭력과 매매춘 문제 등을 담당하는 ‘라인(line)부처로서의 기능(sectoral function)’을 가지는 동시에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통하여 타 부처에 성 평등 정책을 주류화 하는 ‘총괄적인 기능(oversight function)’도 가지고 있다. 여성부가 출범한 이후 여성정책이 확대·강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적은 인력과 예산, 성 차별에 대한 준사법권과 시정명령권의 부재 등으로 인한 한계를 안고 있다. 여성정책의 특성상 여러 부처에 흩어져서 추진되는 여성정책과 발전계획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서는 여성부가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기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근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된 이후에 가족업무의 이관도 거의 확실히 되고 있는데, 집행부처로서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은 환영할만하지만 여성부 본연의 성 주류화 업무가 소홀히 다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하여 조직구조나 예산, 인력 등에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관 집행업무가 확대된다고 하여도 여성정책국의 위상을 높여서 성 주류화를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 여성단체 및 연구자와 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 나) 여성정책조정회의

법 정부차원의 여성정책 조정기구로 2003년에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신설되었다. 종전에는 정부내 여성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데다, 여성정책조정을 위한 협의 기구도 부재하여 여성부가 여성정책을 조정·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였으며, 각부처의 기획관리실장을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아직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활성화하는 등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박숙자, 2004).

#### 다) 여성정책담당관실

1998년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림부에 설치된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중앙부처의 성평등 정책 확산을 위한 핵심적인 부서(gender focal

points)이다. 부처별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된 이래 해당부처의 여성발전계획이 작성되고 정책결정 과정의 여성참여가 확대되었으며, 여성의제가 부처의 주요 의제로 채택되는 등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여성정책담당관실이 부처내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기능을 제대로 하기에는 인력과 예산, 그 위상이 너무 취약하다. 아직 여성정책은 일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것이며 여성부서의 일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인 현실에서 일반 부처에서 여성정책을 주류화 시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 담당자가 바뀌면서 현저하게 영향을 받는 등 개인적 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것 등을 보면 아직 여성정책담당관 제도도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하였음을 나타낸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은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설치 후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 주류화의 핵심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였고, 아직도 주 업무는 부처 소관 여성정책업무를 일부 떼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부처내 충분한 권한과 위상의 확보, 특히 부처의 정책을 젠더 관점에서 조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및 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부와 중앙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들 사이의 연계를 공고히 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정부정책의 기획과 예산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처나 재경부와 같은 부처에 우선 확대신설하고 점차적으로 모든 부처에 신설해야 할 것이다(김양희 외, 2002).

#### 라)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부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여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등의 책무를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들 중 여러 곳에서 여성정책부서를 신설하여,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의 경우에 국 또는 과 단위에서 여성정책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광역자치단체의 여성정책부서들은 자치단체 차원의 여성정책중장기계획을 작성하거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여성정책을 발굴·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들 기구 및 정책업무가 시·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하고 있으며, 아직 여성부와의 효율적인 정책협조를 위한 연계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자치단체 안에서도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부서간 협조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여성정책부서가 타 부서의 정책에 젠더 관점을 주류화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여성정책 업무가 과 단위는커녕 계 또는 담당 수준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여성정책이 청소년 업무 등 다른 업무와 묶여 있어 계 수준에서조차 위상을 확립하지 못한 곳도 많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에 비하여 예산부족,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하여 정책추진 및 성 주류화에 장애가 많다.

종합하면 자치단체의 여성부서의 신설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지역 여성의 요구가 보다 많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부서가 낮은 위상, 부족한 예산



과 인력, 약한 협조체제 등으로 인하여 주변화 되어 있다. 게다가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는 데다 전문성과 경험의 부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 과거의 관행대로 복지 업무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자치단체 내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협조부서 지정, 여성부서의 위상 제고 등이 필요하다.

#### 마) 국회여성위원회

국회여성위원회는 1994년 6월 설치되었던 여성특별위원회가 2002년 3월 여성부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로 개편된 것이다. 신설된 여성위원회는 여성부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로서 위원은 다른 위원회와 겸임하게 되어 있다. 여성위원회는 법률안·청원 등의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여성특위와는 달리 법률안 제안권과 의결권을 가지게 되어 여성부의 예산안·결산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여성부에 대한 국정감사·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위원회는 2002년 10월 24일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성인지적예산편성및자료제출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내 성 주류화에서 중요한 부분인 성 인지 예산을 위한 여론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

#### 2) 법적 시스템

입법 및 사법기관을 포함하는 법률 구조, 법률의 내용, 그리고 법문화를 포함하는 법률 시스템은 성 주류화를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환경을 구성한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 이래로 남녀평등을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받아들이고 있고 각종 법률을 통해 이를 구체화해 왔다. 1980년대 이후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제도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평등의 형식적인 틀은 어느 정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에서 명시하였던 각종 성 차별적 법령과 조례, 규칙의 발굴 및 개정작업은 정책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작업이며 주류화를 위한 적절한 것이었다. 국내에서 이 같은 작업은 1999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평가하는 작업(김양희, 1999a,b)<sup>36)</sup>으로 시작되어, 그 후 중앙부처의 차원에서의 작업으로 김선욱(2000)이 보건복지 법령의 성 차별성을 점검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성평등조례 제정 및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36) 김양희(1999a,b)는 [경기도 조례 및 규칙의 성차별적 내용]과 [강원도 조례 및 규칙의 성차별적 내용 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에서 조례 및 규칙의 성차별적 내용 점검의 기준을 설정하고 성차별적 내용 발굴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한 바 있다.

## 가) 성평등을 지향하는 주요 여성관련법

### (1)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 및 개정은 성 주류화의 매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동법은 여성의 주류화를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국내 최초의 법령이었다. 2002년 개정으로 잠정적 우대조치를 적극적 조치로 명문화하고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분리통계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성 주류화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내용<sup>37)</sup>을 확충하였다. 동법의 상징적 의미가 크고, 실제 성평등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법의 명칭과 내용, 목적과 기본 이념에서 성평등 원리의 표현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현재 성인지전략기획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의 성격과 체제를 성 주류화 패러다임에 적합한 것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2)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3) 남녀고용평등법

#### 37) <표> 여성발전기본법과 시행령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조항

##### ■ 여성발전기본법(개정 2002.12)

###### 제10조 (정책의 분석·평가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 하여야 한다.
- ② 여성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11]

#####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개정 2003.3.)

제7조(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교육) 여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3.12]

제8조(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 ①여성부장관은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지원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3.3.12]

###### 제9조(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지침 등)

- ① 여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의 방향, 절차, 대상정책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정책의 분석·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석·평가계획 및 분석·평가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여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연 1회 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3.12]

남녀고용평등법은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간접차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법 적용의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있는 여성근로자에게까지 법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산전·후 휴가급여의 지급과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재정 및 사회보험에서 분담하도록 명시하고, 남녀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 및 비용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향후 이 법이 노동현장에서 적극 실천되도록 하는 과제가 남아 있으며, 산전후 휴가급여의 사회분담화나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의 확대 문제 등은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나) 가부장적이며 여성차별적 법 - 가족법

헌법상의 남녀평등 이념에도 불구하고 가족법은 1958년 제정 당시부터 남성 중심적이고 부계혈통 계승을 강조하는 유교적·가부장적 가족제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남녀 차별적인 요소를 가진 대표적인 성차별 법이다. 그동안 꾸준히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며, 그 성과로 1990년에 개정된 현행 가족법은 개정 이전에 비하여 많은 점에서 남녀평등한 가족관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나, 호주제도의 존속 등 여전히 그 기본적인 관점은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자녀를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아버지 호적에 입적시키는 규정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유보조항으로 남겨놓고 있는 “가족성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한 부부 동일한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항(제16조(g))과 관련되는 것으로 부계혈통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호주제 폐지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 3) 국가 여성정책계획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 제297조에서 각 국에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전략과 행동계획을 개발하도록 촉구함에 따라 한국정부는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최초의 종합계획인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였으며, 2004년 말 현재 제2차 계획(2003-2007)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은 대부분 성 주류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데 비해, 제2차 기본계획은 두 가지 추진전략 중 하나로 성 주류화를 설정하고 있고(다른 하나는 협력체계 구축임), 10대 정책과제 중 첫 번째로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을 두고, 그 아래 여성정책 추진기구 확대 및 성 인지적 예산 수립, 정책의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조성을 포함하고 있다.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조성의 세부과제로는 여성정책평가 및 정책의 성별분석체고 구축, 성 인지적 통계생산 및 보급, 공무원의 성 인지적 정책형성 교육·훈련 활성화 등을 명시하고 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그동안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시행계획과 실적을 단순히 취합하는 식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2001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제8條(年度別 施行計劃의 수립등)에 점검을 위한 조항을 삽입하여 이제 여성부가 점검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②女性部長官은 施行計劃을 調整하고 그 履行狀況을 點檢하여야 한다”). 현재 성인지전략기획연구사업 중 하나(‘여성정책기본계획 점검’)로 기본계획의 이행점검을 위한 지표와 편람을 개발하면서 아울러 2차 계획의 1차 년도 이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계획이므로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여성부가 타부처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진입지점(entry point)을 제공한다. 따라서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그 결과에 대한 환류를 통하여 각 집행주체들이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경험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나. 성 주류화의 직접적 수단

### 1) 젠더예산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이후, 여성관련 정책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관련 예산에 대한 분석과 이에 기반한 성 인지적 예산편성과 집행방향의 제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문제인식 하에 성 인지적 예산 분석(Gender-Sensitive Budget 또는 Gender Budget)이 성 주류화 전략의 구체적인 도구로 부상하였다.

예산은 정책의 구체적 표현인 동시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정책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으로 표현된 정부의 활동은 정부가 진정으로 어떤 정책을 중시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여성정책과 같이 포괄범위가 넓은 경우, 정책방향과 우선분야를 알기 위해서는 예산분석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 성평등을 위한 예산할당(젠더예산)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젠더예산이란 공공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전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것이다. 젠더예산은 구체적으로 ①예산 및 예산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부처내 인식 제고 ②정부의 세입세출이 갖는 젠더함의를 여성에게 제공 ③성평등과 인간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에 국가 자원의 배분 등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젠더예산분석은 아주 최근에 이르러서야 시도되기 시작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00년 이후 여성특별위원회(2001년부터는 여성부)의 예산을 중심으로 여

성예산을 분석하고, 신규 또는 확충되어야 할 예산을 포함하여 중앙정부의 여성관련 예산요구안 및 여성부 예산요구안을 제시해 왔다. 여성민우회는 2001년 이래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에 대한 젠더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분석 결과, 대체로 여성정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점과 많은 여성정책이 비예산사업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여성정책사업이라는 이름아래 간혹 여성을 대상으로 할 뿐 전통적 남녀관계를 답습 또는 강화하는 사업들도 발견되고 있다.

2002년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된 「200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이 2003년 투자재원 배분 방향의 하나로 포함되었고, 2004년에는 보육을 위한 예산이 명시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여성단체의 젠더예산 분석 작업 및 그 결과에 대한 적극적 홍보활동에 힘입은 바가 크다.

또한 2002년 10월 24일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성 인지적예산편성및자료제출촉구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에서는 예산안편성지침의 작성 및 예산안편성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여성관련예산의 편성기준 및 내역을 명확히 밝히고, 여성관련예산의 현황 및 편성내역 등 관련자료를 여성부와 국회 여성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향후 입법부와 행정부의 추가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젠더예산이 성 주류화의 도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분석이 성 주류화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 당면한 과제는 각 부처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지출된 예산(성 특정적 예산)과 보육예산 등 양성 간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한 예산(성 형평성 예산)을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젠더예산 분석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예산을 대상으로 여성에 미치는 영향과 수혜의 범위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적합한 도구개발이 요구되며, 또한 예산뿐 아니라 지출에 대한 분석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2) 성 인지적 통계 및 지표

성 인지적 통계와 지표는 정책의 입안, 설계 및 실행에서 젠더 관점을 주류화 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도구이다. 남녀별로 구분된 자료와 지표는 여성의 상대적 지위에 대한 개관을 보여주고, 어떤 부문에서의 정책개입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전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돕는다. 또한 정책의 실시이후에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북경대회를 기점으로 성 인지적 통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성 인지적 통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성 인지적 통계가 남녀구분 된 통계뿐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조건·특수한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생산되는 자료라고 할 때, 한국 성 인지적 통계의 생산·가공·구축 상황은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보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현재 발간되고 있는 통계자료

는 시간사용조사를 제외하곤 대부분 기존에 생산된 자료를 재분석·재편집하는 가공 통계로서, 통계의 생산과 수집과정에서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존 자료의 범위 안에서 분석·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을 설계하고 모니터 하는데 충분히 유효한 자료가 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성 인지적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자료부족을 메꿀 수 있도록 새로운 통계자료의 생산이 급선무로 보인다.

2001년 1월 29일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제13조)에서 여성부장관이 효율적인 여성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론조사, 성별통계 작성 등을 통하여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여성관련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관련 통계 생산, 작성 및 제공을 여성부의 주요 정책 분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보다 적극적인 성 인지적 통계자료의 구축 및 지표의 개발이 기대된다<sup>38)</sup>. 그러나 여성부가 통계생산 담당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바, 통계청에 성 인지적 통계 생산을 위한 부서를 설치하고, 각 부처의 정보 및 통계 담당 부서에 성 인지 통계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첫째 모든 통계의 젠더 분석 및 통계개선을 위한 업무협조, 둘째 일반 통계담당자의 젠더 의식 교육, 셋째 젠더문제와 관련된 특별조사의 실시 등이다. 아울러 통계의 생산부서와 수요자 집단으로 구성된 특별 임시위원회(가칭 성 인지적 통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발간단계에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성 인지적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성부와 6개 부처 여성정책담당관실,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실 또는 과 등은 통계생산자이자 수요자로서 특별 임시위원회에서 이중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통계생산자의 입장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통계생산을 실시하고, 통계수요자의 입장에서 통계청 등 통계생산담당부서에 필요한 성 인지적 통계를 요청하는 것이다.

기존통계의 젠더분석이나 성 인지적 통계의 개발은 매우 전문적인 작업으로 일반 통계담당직원에게는 낯설고, 담당하기 어려운 이슈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에 통계청 또는 여성부에 (가칭) 성 인지적 통계 연구회를 구성함으로써 외부전문가 집단의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계조사의 주제 설정이나 개념, 용어 등 뿐 아니라 각종 조사표나 발간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특별히 연구가 필요한 주제를 설정하여 연구조사활동을 하는 것이다.

38) 현재 성인지전략기획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성인지통계혁신전략'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성 인지 통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데서 더 나가서 생산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고 있다.

### 3) 정책의 젠더분석(성별영향분석평가)<sup>39)</sup>

젠더분석이란 기존의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법제들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하여 모든 정책이 여성과 남성의 관계의 특성, 그들의 사회적 현실, 삶의 기대들, 경제적 상황 등에 민감하게 되도록 하는 과정이다 (김양희 외, 1999). 젠더분석은 모든 이들이 성에 관계없이 정책과 프로그램, 법제로부터 똑같은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 즉, 정책의 성 중립성(gender-neutral policy)에 대한 가정을 반박한다. 젠더분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1995년 제4차 북경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의 개념이 행동강령에 포함되면서인데, 행동강령은 ‘정부 및 관계자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 관점(gender perspective)을 주류화 하는 능동적이고 명시적인 정책을 장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결정이 여성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반드시 분석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여성정책에 있어서의 성 주류화를 각국에 권고하였다. 따라서 이제 정책발달의 모든 과정에서 성 관련 쟁점(gender issues)를 고려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및 관계자의 의무사항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연구자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정책의 젠더분석이 실시되어 오다가 2002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성별통계의 생산에 대한 제도적 조치를 강화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도 ‘정책의 양성평등관점 통합’을 첫 번째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여성정책평가 및 정책의 성별분석제도 구축을 세부과제로 포함하여 국가정책의 모든 영역 및 단계에 성 평등적인 시각을 통합하기 위한 기틀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조치에 따라 정부의 모든 정책과 개별사업들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성부는 2004년 6월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을 개발하여 각 행정기관에 보급하였고, 정책분석평가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4년에는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등 9개 기관과 함께 각 기관의 주요 정책 중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정책효과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 정책 10가지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sup>40)</sup>, 2005년부터는 타 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에 확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성인지전략기획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성별영향분석을 위한 안내서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의 모든 부처와 지방자

39) 일반적 용어로는 ‘젠더분석’을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것을 칭할 때는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40) 2004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사업 및 참여부처/기관

치단체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분석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 4) 성 인지력 훈련

정책 결정자의 의식과 역량은 주류화의 필수 요건이다. 여성정책이 정부 내에서 주류화 되기 위해서는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성 인지력(性 認知力)이 향상되어야만 한다. 성 인지력 훈련은 훈련대상자들의 성 인지력(gender sensitivity)를 향상시킴으로써 관련 업무를 추진할 때 여성과 남성의 독특한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관점을 고르게 반영하여, 특정성에 대한 편파가 없이 공정하게 프로젝트가 기획되고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평등과 여성의 세력화(empowerment)에 기여하게 된다(김양희 외, 2001).

국내에서는 정책 담당자들의 남녀평등과 성차별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은 많았지만 정책 수립의 전 과정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부족하였다. 그러던 것이 90년대 말부터 한국여성개발원을 중심으로 '성 인지력(gender sensitivity) 향상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범 적용을 거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2003년 여성부 산하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개원되면서 그 내용이 다양화 되고 훈련 대상도 확대되는 등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아직 훈련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고위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 인지력 훈련은 거의 없다. 국내에서는 성 인지력 훈련이 아직 이론과 실천의 양 측면에서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들의 정보 및 경험의 교류와 평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성 인지력 훈련은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 주요과제로 선정되었으며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서도 그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아직 부문별, 대상별 성 인지력 훈련을 위한 자원과 프로그램 및 훈련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서구적인 접근방법으로서의 성 인지력 훈련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

연번	과제명	소 속
1	암 관리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재직자 직업훈련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노동부
3	문화기반시설과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문화관광부
4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농림부
5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학기술부
6	수형자 직업훈련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법무부
7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법무부
8	서울시 복지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서울시
9	충북 장애인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충청북도
10	전북 노인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라북도



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 인지력 훈련이 국내에서는 초기인 만큼 젠더분석을 위한 정책 사례도 아직 충분히 발굴되지 못한 상태이다. 향후 훈련프로그램을 다양화, 체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며 특히 고위직부터 훈련을 받도록 제도화 해야 할 것이다. 훈련가 양성도 시급하다.

### 3. 성 주류화 및 행동강령의 이행이 어려운 이유

우리나라에서 성 주류화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이제 시작되었다. 박숙자(2004)는 ①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적극적 조치라는 용어를 명문화하고 그 외 개별법에 의해 여교수, 여성과학기술인, 여성정치인 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확대하였다는 점, ② 역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여성정책 평가 및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 ③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성 인지력 향상과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등에서 2003년을 성 주류화를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 도약의 해라고 보았다. 또, 공중화장실의 남녀 변기수를 성 인지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도 상징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더불어 앞으로 정책진영에서 성 주류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감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작업들이 보다 폭 넓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예: 배드뱅크 정책), 그 정책 이슈와 관련된 성차나 성불평등(성별 신용불량자 현황이나 신용불량자가 된 원인; 신용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한 신용불량 탈출 가능성; 배드뱅크 자격 기준의 성별 적용가능 인구 등), 가능한 한 성평등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수단 검토(신용불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수단 중 어떤 것이 성평등에 더 기여할 수 있을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가. 성 주류화가 잘 되지 않는 이유

##### 1) 젠더이슈의 도출 미비

90년대 중반부터 성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분석/평가하는 연구들을 해왔지만 여전히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일상적으로 젠더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잘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Hannan(2003)은 그것은 무엇보다도 정책담당자들의 젠더 관점과 자기들의 정책사이의 연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이 점에 대하여 정책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연구한 결과물들이 효과적으로 확산, 활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정책에 성 주류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각 분야 또는 정책문제의 젠더관련 이슈를 도출하여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빈곤퇴치와 젠더가 어떻게 연계되는가?; 쓰레기 종량제와 젠더가 어떻게 연계되는가?; 지방분권과 젠더가 어떻게 연관되는가? 등의 물음을 던지고 답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 그동안의 성 분석은 주로 여성과의 관련성이 높은 정책에 대하여 이루어져 왔지만 향후 모든 정책 분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거시경제정책, 국가의 큰 정책 틀을 바꾸는 경우에 어떠한 젠더 이슈가 있는지 우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생산한 지식을 정책담당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하겠다.

## 2) 여성의 관심 수렴 미흡

성 주류화가 잘 안되는 두 번째 이유는 여성의 관심을 충분히, 그리고 적절하게 수렴하고 그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현장 여성의 요구를 수렴하거나 그들과 가까이 일하는 여성/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이다 (예: 빈곤퇴치 정책의 경우 여성자활사업을 하는 단체의 전문가의 자문).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양적 참여는 많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참여가 특정 분야에 편중된 경향이 있고, 양적 참여가 의사결정의 성 주류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정책은 위원회간 참여의 편중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위원회 의사결정의 과정과 내용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개입을 위한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여성정책국에서 도청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의식고양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한 것,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부처내 위원회의 여성위원들의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시도이다.

## 3) 책무성 장치 부족

책무성 장치의 부족 또한 성 주류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예컨대, 정책의 젠더 관련 이슈를 도출하기 위하여 성 인지적 통계를 필요로 하는데 해당 분야에 그러한 통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어렵게 된다. 공무원들의 성 인지력 또는 주류화 역량이 중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와 함께 여성단체 및 젠더 관련 활동가들의 역량도 중요하다. 매우 활동적인 활동

가들도 성 주류화에 대하여 “어렵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면 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 성 주류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의지를 가지도록 하고, 더 나아가 모니터 평가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여성단체 활동가를 위한 훈련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 나. 행동강령 이행의 도전요소

한편, Pittaway(2001)은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의 도전요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 바 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에도 국내에서 성 주류화를 위한 작업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북경행동강령의 틀을 규범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아래에서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정치·사회적 의지:** 베이징 행동 강령(BPA)과 성과 문서(outcome document)에 대한 이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여성의 지위에 변화를 가져오려면 사회적 태도 및 보다 광범위한 사회 담론이 변해야 한다. 또한, 법률 및 정책 입안자들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몇몇 나라에서는 정부의 탈중앙화(decentralization)로 정책 모니터링 및 일관된 예산배정이 어렵게 되고 있다.

**둘째, 전체적, 통합적 접근의 부족:** BPA의 12가지 중요 분야는 젠더의 평등, 발전, 평화라는 커다란 구조물의 12개의 기둥이다. 분야별 의제들이 상호 연계를 가지면서 추진될 때 더 큰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성지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적 메커니즘의 부족:** 여러 나라에서 여성국을 두고 있지만 낮은 위치에 있다. Gender focal points 역시 정책에 영향을 주지 못할 만큼 무력한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들 상호간의 전략적 교류와 협력이 부족하다.

**넷째, 자원 문제:** 많은 나라에서 BPA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로 자원 문제를 든다. 특히 1990년대 후반의 경제 위기를 맞은 나라의 경우 더 그렇다.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정치적 의지 그리고 여성지위 향상에 쓰여지는 자원이 궁극적으로 전체 사회 상황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또한 정부 정책을 가로지르는(cross-cutting) 젠더 관점의 도입은 반드시 새롭고 고비용의 사업을 도입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존 사업을 재개념화(reconceptualisation), 초점수정(re-focusing), 개선하는데 강조를 두어야 한다.

**다섯째, 모니터/측정/평가:** 일부 국가들은 BPA 이행을 모니터하거나 측정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달성하기 불가능하게 보이는 지표 수립과 국제적으로 동의된 표준으로 측정됨으로써 국가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보인다. 이행의지는 단지 조잡한 투입과 산출 수단에 의해 측정되지 않는다. 주요 stakeholder에 의해 배분된 자원 그리고 현 법률정책 및 실행을 채택하려는 마음가짐이 주요 측정 대상이기도 하다.

**여섯째, 통합적 인권 틀의 부족:** BPA를 광범위한 인권 및 법적 틀 안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면, 여성들의 요구는 주변화 되고 경제, 사회적 위기 시 가장 먼저 희생될 것이다. 여성의 권리가 인권으로서 생각될 뿐 아니라 모든 법적, 정책 기구의 기초로 간주되어야 한다. 국가 계획의 타겟들은 직접적으로 여성의 인권 틀과 연결되어야 한다. 권리 담론이 타겟 담론에서는 부족한 강력한 도덕적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일곱째, 행동을 위한 제안된 틀**

1단계 - 국가 계획

2단계 - 전체적인 정부 접근-여성국

3단계 - 지역 정보 센터

4단계 - 전략적 이행

자료수집과 요구분석-> 국가 우선순위 설정-> 인권 틀 개발-> 자원 및 기금 탐색-> 주요 이해당사자들과 파트너십 구축-> 우수사례에 기초한 프로그램 디자인-> 이행-> 측정과 모니터, 평가

5단계 - 측정 및 평가를 위한 통합된 국가, 지역 틀 수립하기

질적, 양적 측정이 요구된다. 통계와 지표는 강력한 설득도구가 될 수 있다.

**여덟째, 지표 및 산출물(outputs) - 단기적 전략:** 이행 측정을 위한 지표 등 종합적 체계가 개발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측정하는 데 필요한 성별 분리 자료 수집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

## **4. 보다 효과적인 성 주류화를 위한 과제**

### **가. 진입지점을 충분히 활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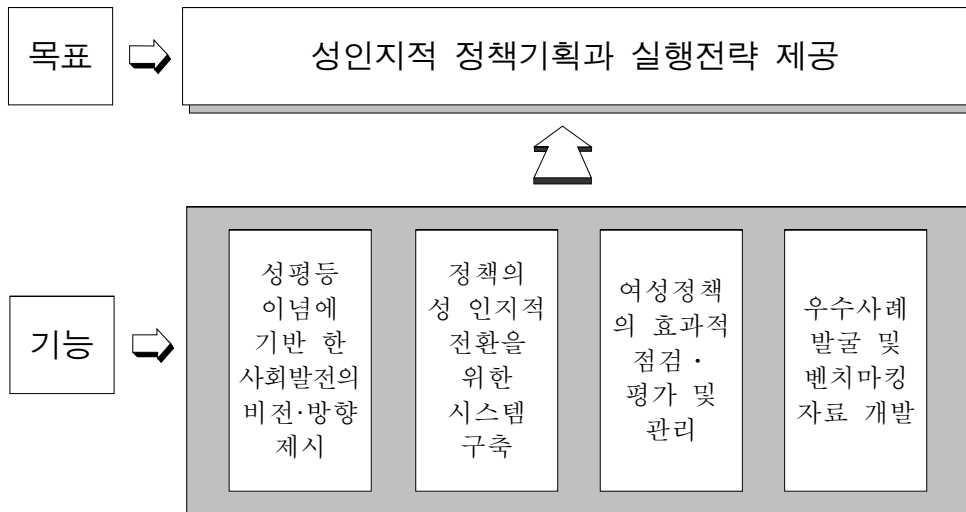
이제까지 이 글에서 mapping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진입 지점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합법적인 근거를 가진 국가 여성정책중장기

계획은 분야별 목표와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이행 의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을 주류화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진입지점이자 기본적인 프레임을 제공한다. 아울러,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중심기구로서의 책무를 부여받은 여성부는 범 정부 차원의 성 주류화의 촉매자가 될 수 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여성정책조정기구도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정책담당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6개 부처 역시 부처별 성 주류화의 진입지점이 될 수 있으며, 국회의 여성위원회는 입법부의 성 주류화의 진입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활동 역량을 가진 여성운동단체들이 있으며, 여성연구 및 정책 개발의 노하우를 가진 정부출연연구소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성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명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의 자원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여성정책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야말로 이 귀한 구슬들을 잘 꿰어 엮어 내기만 한다면 성 주류화를 위한 틀을 구성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구조와 기제들을 서로 연계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움으로써 시스템 차원에서 성 주류화를 위한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여성부는 성 주류화 업무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자체 조직과 역량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 나. 지속적인 성인지전략기획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여성부의 의뢰를 받아 성 주류화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성인지전략기획연구사업’은 융합과 공생의 시대가 요구하는 젠더관계의 재편성과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효과적인 性 認知的 정책기획(policy planning)과 실행(implementation)을 위한 실질적·기술적 전략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기능은 ①성평등 이념에 기반한 사회발전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이론구축), ②정책의 성 인지적 전환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론을 설계하며(도구 개발), ③여성정책의 효과적 점검·평가·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기본계획 점검 및 점검 체계 개발), ④성 인지적 정책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벤치마킹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림 1> 性認知전략기획연구사업의 목표 및 기능

이 사업은 <표1>과 같이 모두 이홉 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내외 연구진 4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표 1> 성인지전략기획연구사업의 단위과제 구성

과 제 명	성 격
성인지전략기획연구사업단 총괄팀	사업 총괄
1.1 한국 여성정책의 뉴 패러다임 정립	이론구축
1.2 여성발전기본법의 효과 및 발전방향	법·제도적 역량 강화
2.1 분야별 성 인지 정책 지침 개발	성 주류화 도구 개발
2.2 성 인지 통계혁신 전략	성 주류화 도구 개발
2.3 공무원의 성 인지력 향상 훈련 실태 및 발전방안	성 주류화 역량 구축
3.1 지자체 성 주류화 기반분석 및 여성부와의 연계방안	지역의 성 주류화 기반 조성
3.2 여성정책기본계획 점검	여성정책평가관리 체계 구축
3.3 여성정책방향과 의제설정을 위한 일반국민 및 전문가조사	베이스라인 데이터 집적, 국민만족도 관리
4.1 해외 성 인지 정책 우수사례 및 자료집 발간	벤치마킹 제공

성인지전략기획연구사업에서 작업하고 있는 주류화를 위한 의제와 도구 개발, 정책 점검 등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성인지전략기획연구사업은 현재 진

행되고 있는 10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사업과 함께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잠재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의 결과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러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면 여성부는 정부정책의 성 인지적 혁신을 이루는데 높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 다.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초기 개입이 시급하다.

이상의 작업이 밑받침이 될 때 여성부는 성 주류화 취지에 맞게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발 빠르게 개입하여 그야말로 거시정책에도 성 인지적인 관점을 통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분권과 정부업무의 지방이양만 해도 성 인지적 개입이 필요하다<sup>41)</sup>. 전체적으로 분권이 현재 일부 부처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자칫하면 지역간 과도한 개발경쟁만을 부추기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초래할 위험성도 있다. 기왕 이양하기로 결정된 정책사업의 경우에는 여성부가 신속하게 방향 및 지침을 제시하고, 평가들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자체 여성정책은 아직도 복지 위주의 잔여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업무 이양에 따라 지역 여성정책이 확충될 수도 있고 더 약화될 수도 있다. 지역 여성정책의 현실을 내용과 예산, 인력 등의 측면에서 보면 성 주류화와 거의 무관한 양상에 놓여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향후 성 주류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의식 전환과 투자가 요구된다.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 라. 성평등 감수성은 시대의 요구이다.

성평등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 경제개발, 사회개발 등의 국가정책의 본질적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그 해결을 위한 여성(성평등)정책은 모든 국가정책의 영역에서 주류로서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김선욱, 2003). 특히 현대의 국제경쟁력은 경제적 효율성으로만 가늠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제도의 합리성과 윤리성, 그리고 사회, 문화, 정치 등 제반 역량의 총체적인 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때, 정책의 성 인지적 관점 통합은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41) 김혜선(2003)은 이상적인 정부혁신은 인사와 조직, 문화혁신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앞으로 중요한 부분인 조직문화혁신이고 “조직문화를 바꾸는 부분은 여성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정부혁신과제 안에 여성정책이 녹아들면서 같이 추진이 되고 여성의 관점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옥(2003)은 성 주류화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첫째**, 조직의 발전과 현대화를 가져온다.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의 최대화, 사회전체 역량의 최대화, 개혁적, 창조적 가능성 커질 것이다.

**둘째**, 조직에서 차이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함으로써 사회문화적 차이 그룹간의 갈등을 최소화한다. 다양성의 확산, 모든 기능과 지위에서 여성의 접근성 확대, 직·간접적 편견의 제거에 기여한다.

**셋째**, 대기업에도 유용하다. 최근 기업에서는 고객의 다양화에 부응하는 기업전략으로 diversity management를 중시한다. 다양성 속에서 창조력, 유연한 적응력이 있다.

조한혜정(2004)도 마찬가지로 남성도 포괄해내는 정책을 통하여 “다양성의 매니징을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였다. 성 주류화는 ‘남성중심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공공영역을 해체하고 여성중심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생산 중심의 경쟁원리 사회를 인적 생산과 보살핌을 중심으로 한 공생의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해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남성중심의 공공정책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에는 무관심하였다. 예를 들어, 생활폐기물 정책에서 쓰레기가 집밖으로 나온 다음에는 정책이 개입을 하지만 가정 안에서 누가 어떻게 쓰레기를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책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였다(김양희 외, 2004). 그런데 여성정책의 상당부분은 사적인 영역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다룬다. 이 점에서 볼 때 정책의 성 주류화는 공공정책의 본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특정 분야의 정책에 성 주류화가 이루어질 경우 정책의 비전이 달라질 것이다<sup>42)</sup>.

---

42) 성 주류화는 여성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일 뿐 아니라 사회시스템 운영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탈 위계적인 정보경영의 시대, 인류가 생태계의 위협으로부터 마지막 신호를 받게 될 21세기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창조력과 생명에 대한 감수성, 다양성에 대한 인내, 수평적이며 유연한 사고를 요구한다. 그런데 가부장적 원리가 중심을 이루던 사회 체제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으므로 젠더 구조의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깨달음이 대두되고 있다. 대안적인 원리와 가치를 통합하는 사회 체제가 필요하며, 이는 사회에서의 여성의 완전한 통합과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작업은 정책에 성 인지적인 관점을 통합할 경우 정책의 품질이 어떻게 향상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작업과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김양희 등(2004)은 환경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한다면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이론화 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현재의 시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생존과 삶의 질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포함하며(세대내 형평성), 이 권리가 미래세대로까지 담보되도록 하고(세대간 형평성), 그 과정에서 인간과 자연 상호간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생태적 형평성)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성의 첫 번째 요소인 세대내 형평성 개념에서 성간 형평성은 핵심적이다.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제시한 지속가능성의 일곱 가지 영역 중 첫 번째가 ‘시민집단이 의사결정과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체제’이듯이 환경부문의 여성의 참여와 세력화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둘째로, 여성들은 일상에서 자녀 양육과 교육에 남성보다 깊게 관여하면서 미래세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간 형평성을 담보하는 일 역시 환경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촉진될 것이다. 셋째로, 여성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강조하



급속히 확산되는 글로벌화에 따라 국가의 통제 능력의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반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진전에 따른 빈곤의 확산,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개별 국가안에서 국가의 사회통합적 역할을 더욱 필요로 하는 요인이 되며, 공공성의 확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조형, 2002).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공공정책에서 협치의 구조와 문화로서 추구하는 거버넌스 (또는 굿 거버넌스) 패러다임에도 여성의 주류화와 젠더 관점의 주류화, 그리고 주류의 전환을 강조하는 성 주류화는 매우 적절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의 참여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조율하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성 주류화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성평등 감수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마. 여성들도 성 주류화에 걸맞게 움직이자.

끝으로 성 주류화는 모든 정책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므로 과거 우리 여성들끼리 주로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하던 시절과 달리 정책의 counterpart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정책 연구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이며, 여성단체들의 대 정부 로비력도 한층 더 다양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여성부가 여성정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성정책 분야 밖에서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부처가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여성정책조정회의 등과 같은 성 주류화 제도를 어떻게 운영·관리할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따라서 여성부 내부의 정책역량 강화, 행정의 효율화가 한층 더 중요해 진다.

#### 바. 남성, 소년들과 함께 하자

끝으로 성 주류화 작업에 남성과 소년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는 2004년 새로운 이슈로 남성과 소년을 주목하였다. 사실 90년대 이후부터 성평등 증진을 위한 국제회의 의제에서 남성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하였다. 특히 폭력, 개발, 성, 재생산 보건, 육아와 가족, 노동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성의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남성이나 소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여성들의 투쟁을 희석 시키고 관심을 분산시키며 여성문제를 사소한 것으로 만들기까지 한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있지만 남성과 소년은 여성문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동시에 그 해결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음에 틀림없다(Flood, 2004). 북경회의에서도 성평등을 위한 활동에 남성들이 충분히 참여하도록 격려할 것을 강조하였고, 북경+5(유엔 제

는 문화적 에코페미니즘에 의하면 생태적 형평성을 담보하는데도 여성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23차 특별총회)에서도 정치선언문에 “남성들은 성평등 증진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여 여성과 공동책임을 져야한다”고 명시하였다. 가장 최근으로 2004년 제48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북경+5의 정치선언문의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 ‘성평등 구현을 위한 남성과 소년의 역할’을 주제의 하나로 채택한 바 있다. CSW에서는 남성과 소년을 여성에 대한 폭력의 가해자나 여성문제 해결의 수혜자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 혁신의 참여자, 성별 정의를 추구하는데 잠재적 동맹자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Connell, 2004). 그러므로 남성과 함께 하는 성 주류화의 전략도 함께 모색해야 하겠다.

## 참고 문헌

- 김선옥(2001). 세계화와 한국여성정책의 변화와 방향.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성의 정치학 세미나 자료집」. 2001.10.19. 이화여자대학교
- 김선옥(2003), 한국사회의 여성현실과 여성정책, 2003년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추계학술세미나 「한국사회 갈등구조: 진단과 처방」 자료집
- 김양희(1999a) 「경기도 조례 및 규칙의 성차별적 내용」, 미발간자료.
- \_\_\_\_\_(1999b) 「강원도 조례 및 규칙의 성차별적 내용 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미발간자료.
- 김양희(2001).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이론 및 방법론, 쟁점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세미나」 자료집 2001.9.26. 한국여성개발원
- 김양희외(2002), 「한국의 젠더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UNDP
- 김혜순(2004), 2004년 여성정책의 기대, 「여성정책포럼」 2004년 봄호
- 문유경(2000). 「성인지적 통계자료 구축」.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박숙자(2004), 2003년 여성정책의 성과, 「여성정책포럼」 2004년 봄호
- 조한혜정(2004). 페미니즘과 여성정책: 여성의 경험과 관점에서 사회 인프라를 만든다. 「한국 양성평등정책의 향후 방향」 워크숍 자료. 2004.11.8. 한국여성개발원
- 조형(2001), 한국사회의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여성의 시민적 삶의 질,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성의 정치학」 세미나 자료집. 2001.10.19. 이화여자대학교
- Connell, R.W.(2004). 'The role of men and boys in achieving gender equality'. UNCSW 48차 회의, 패널 II 자료. 뉴욕 2004.3.1-12.
- Corner, L.(1999) 'Strategies for the empowerment of women: Capacity building for gender mainstreaming' A paper presented at the High-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 to Review regional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1999. Oct.26-29, Bangkok, Thailand.
- Pittaway, E.(2001). 'Modalities, measures and strategies to meet the challenges of gender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in the Asian and Pacific region', 'Women in Development Discussion Paper Series No. 11',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Fraser, N. (2000), "After the Family Wage: a Postindustrial thought Experiment". Barbara Hobson(ed.) 'Gender and Citizenship in Transition'. Routledge.
- Flood, M.(2004). 'Men's roles in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in the Asian-Pacific region.' UNESCAP High 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 to Review Regional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nd its Regional and Global Outcomes. 2004.9.7-10. 방콕

- Hannan, C.(2003). 'Transforming empowerment and gender mainstreaming'  
한국여성개발원 국제심포지엄. 『International Symposium on a New Vision  
for Gender Equality: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2003.4.17-18.
- Molyneux,(1985). 'Mobilization Without Emancipation?: Women's Interests, the  
State, and Revolution in Nicaragua'. 『Feminist Studies』, 11, Summer:  
227-253.

## 토론 1

### 『북경+10』 이후 여성정책의 새로운 도전

황 인 자 (서울시 복지·여성정책보좌관)

※ 지난 10년간 국제사회에 등장한 여성정책의 새로운 이슈를 통하여 향후의 도전과제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1995년/북경 (제4차세계여성회의)	1999년 (지방자치단체 기여성선언)	2000년/북경+5 (유엔여성특별총회)	2000년 (밀레니엄 개발목표)	2005년/북경+10 (유엔여성지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과 빈곤</li> <li>○ 여성과 교육훈련</li> <li>○ 여성과 보건</li> <li>○ 여성에 대한 폭력</li> <li>○ 여성과 무력갈등</li> <li>○ 여성과 경제</li> <li>○ 여성과 정책결정</li> <li>○ 여성담당기구</li> <li>○ 여성의 인권</li> <li>○ 여성과 미디어</li> <li>○ 여성과 환경</li> <li>○ 여자어린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자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조성자로서 지방자치 단체</li> <li>○ 고용주로서 지방자치 단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li> <li>○ 지방자치단체 촉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성 부여</li> <li>- 남녀평등을 촉진</li> <li>- 법과 실제상 평등과 차별금지 보장</li> <li>- 여성의 참정권 보장강화</li> <li>- 통계 성별 분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과 보건(women and heal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AIDS, 말라리아 등 질병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여성과 정신적 건강문제, 보건분야 종사자들의 인식제고 교육, 노화문제와 노인여성 등</li> </ul> </li> <li>○ 여성의 인권 및 여성에 대한 폭력(human rights of women and the issue of violence against wom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까지 차별적 범규정개정, 배우자 강간문제, 명예범죄, 인종주의에 근거한 폭력 등 새로운 이슈, 이민정책,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선택의 정서 등</li> </ul> </li> <li>○ 여성과 여아의 인신매매(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한 유형, 이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고관 또는 관계기관·단체간 가구설치 제안 등</li> </ul> </li> <li>○ 세계화(globa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세계화가 던져준 도전에 대한 응전 등</li> </ul> </li> <li>○ 여성정책의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내용을 새롭게 환기하고 주류화의 개념과 접근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 앞으로 여성정책은 주류화에 중심을 두어야함을 강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심한 빈곤과 기아퇴치</li> <li>○ 초등의 무교육의 전면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까지 남아, 여아 똑같이 모든 아이들이 초등교육과정 이수</li> </ul> </li> <li>○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까지 초·중등 교육에서 남녀 차별 근절</li> <li>-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남녀차별 근절</li> </ul> </li> <li>○ 어린이 사망률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까지 5세이하 유아사망률 2/3감소</li> </ul> </li> <li>○ 임산부 건강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까지 출산사망률 3/4 감소</li> </ul> </li> <li>○ HIV/AIDS, 말라리아와 기타 질병퇴치</li> <li>○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li> <li>○ 개발을 위한 세계적 파트너십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역할 (role of national mechanisms)</li> <li>○ 남성의 참여와 역할</li> </ul>

## 토론 2

양 승 주 (노동부 고용평등국장)

### 1. 한국의 성주류화 전략 추진이 미진한 이유는 정책평가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임.

- 1) 노동부의 예) 직무급이 기초된 선진국에서는 가능하나, 연금급인 한국에서는 어려운 경우 있음.
- 2) 외국에서는 80년대에 이미 공공부분 정책평가 시스템 구축- 정책평가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적인 정책마련→형평성의 문제 발견→효율성과 형평성 둘다를 위한 순차적 발전 이루고 있음

### 2. 성주류화의 범위 대상 획일적임.

- 1) 대상의 우선순위, 선별이 필요함.
- 2) 거시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작은 성공들을 통한 성공요인 도출과 유형화 작업이 시급함.
- 3) 공식적 회의와 이론적 접근 이전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한 노하우 축적
- 4) 여성정책의 다양한 이미지화: 다양한 계층과 세대에 맞는 다양한 자우너동원기법 개발 필요

## 토론 3

서 영 주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

### 1. 성주류화 정책의 정당성을 증명할 논리의 개발

- 1) 교육은 기회 평등을 기본으로 성중립적인 분야임. 여성부 정책을 역차별로 보는 비판적 시선 많음.
- 2) 성주류화 정책, 혹은 성민감성 정책으로 양산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대응 논리가 필요함.

### 2. 정책조정 역할의 강화

2004년부터 재정부 기획예산처의 예산 기획 방식 Top-down 방식으로 전환. 이 방식이 여성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짚어봐야 함. 여성정책 조정업무의 책임은 여성정책 담당관실에 있으나 정작 실권은 없음. 조정업무에 따르는 어려움이 많은 반면 성과는 비가시적이어서 집행업무로 치중하게 됨. 여성계 전체의 양적인 발전을 이뤄졌으나 정책 실현의 효율성은 떨어짐.

### 3. 효과적인 여성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협력망 구축

부처간의 네트워크 부족함. 최소한 여성들은 협력할 수 있을 것임. 시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까지 이어지는 연결체계의 부족으로 정책 시행이 어려움. 지역까지 연결되는 기구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 차원의 공동적인 합의가 있어야함.

### 4. 여성정책 홍보 강화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함.

## 토론 4

### 보건복지부의 여성관련 사업과 한계점

김 혜 선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

#### 1. 조정기능의 업무 중요

여성문제가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는 만큼 현재는 주로 조정 기능에 치중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사업과로의 전환문제 제기되고 있음. 담당관실의 비가시적 역할과 성과중심의 사업을 지향하는 행정조직과의 마찰

#### 2. 집행기능의 역할도 일정 부분 필요

집행에 관한 부분은 계속해서 공식·비공식적으로 각 부처에 주요 아젠다와 사업제안 하고 있음. 예를 들어 여성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장애인국에 집행업무 제안함. 그러나 집행 업무가 확보 되었을 때 조정업무와의 상생 효과 이루어질것임. 조정업무의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각 부서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함.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과제가 보고서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범 사업도 필요함(예; 빈곤여성가구주 사례관리 사업추진(3년계획)).

#### 3. 북경행동강령 관련 보건복지부 과제들

- 1) 여성빈곤, 이주여성, 여성노인, 여성가구주 증가 등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정책마련 노력 필요하나 정책적 토양 부족으로 어려움 있음(여성노인, 여성장애인의 생식문제 등).
- 2) 구체적 사업;
  - 국제결혼 여성의 이주문제 실태조사 착수(12월부터)
  - 빈곤여성 가구주 사례관리를 통해 정책개발 연구
  - 여성건강관련 기초 통계자료 마련(3년전부터 정책과제 개발 연구)
  - 국민건강증진법 논의 안건으로 건강증진국 차원의 여성건강관련 부문 예산확보 논의



## 토론 5

### 국가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과제

김 선 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1995년 북경에서의 제 4차 세계여성대회는 1차에서 3차까지와는 달리 정부와 비정부기구의 참가자들이 대거 참가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채택한 북경행동강령에 대한 이행을 정부도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 왔고, 여성단체들도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요구해오면서 앞의 발표주제 1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특히 행정조직과 법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가정생활, 고용 현장,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의 삶과 남성의 삶은 여전히 평등하지 않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북경행동강령에서 강조되었던 것이 성 주류화임. 김양희 선생님께서 “북경+10” 이후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과제에 대하여 그동안의 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좋은 발표를 해 주셨음.

저는 성 주류화를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함. 따라서 기존 여성정책과 성 주류화를 비교해보고,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로서의 성 주류화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몇 가지 보완하고자함.

#### 1. 기존 여성정책과 성 주류화

기존의 여성정책과 성 주류화는 그 중심시각, 담당부서, 정책의 범위, 도구, 정책 목표 등에 있어 다음과 같이 다름.

	여성정책	성주류화
중심시각	여성	여성과 남성
담당부서	여성정책부서	모든 정책부서
정책의초점	여성의 불이익 / 불평등의 문제	모든 정책적 결정
정책의범위	문제중심 / 단기적	포괄적 / 장기적
도구와수단	반 별법	성분석 / 성인지 교육
정책목표	불평등→평등	사회 시스템의 변화
구조적차별의철폐	불가능	가능

<표1> 여성정책과 성주류화

## 2. 성 정책과 성 주류화는 병행전략

성 주류화를 목표로 하면서 그 필요성이 있는 기존의 여성정책은 병행되어야 함. 따라서 여성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도 계속 필요함. 예)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여성의 양적 질적 참여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지원정책.

## 3. 국가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과제

### 1) 성 주류화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 규칙의 마련

- 여성발전기본법 제 10조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 규칙의 마련이 필요.
  -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시행 단계에서 젠더 관점이 통합되도록 하는 절차와 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통하여 성 주류화 실천해야 함.

### 2) 여성부의 과제

- 성 주류화의 핵심 부서로서 모든 정책의 젠더 관점 통합, 점검, 평가의 역할
- 성 주류화를 위한 인력 교육 기관의 역할
- 성 주류화에 대한 자문, 상담, 정보, 교육, 연구 등의 전문기관의 역할
- 여성정책 책임관- 성 주류화를 위한 각 부처의 핵심부서로서의 역할
- 여성부 집행 업무에 대하여 성 주류화 실천 모델을 보여주어야 함.  
예) 보육정책

### 3) 한국여성개발원의 과제

- 성 주류화의 실천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 연구 필요.
-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성 주류화를 실천하기 위해 한국여성개발원에 용역연구 수주할 수 있는 역량 준비 필요.

### 4)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과제

- 성 주류화를 실천해야 하는 모든 분야의 정책 결정직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교육 수행.
- 여성부와 공무원 교육 담당부서의 위탁을 받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수행해야 함.

### 5) 여성단체의 과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에 대한 성 인지적인 감시와 모니터링 필요.
- 지역사회 행정의 파트너로서 비영리사업의 주체로서 활동한 준비. - 정부의 많은 기능이 민간의 비영리 조직으로 이동하고 있음. 행정에서의 민-관의 파트너십 중요함.

## 토론 6

### 『북경 +10』 이후 한국의 여성정책 과제

신 혜 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부의장)

1. 북경 세계여성회의 이후 국제사회의 여성정책 목표는 성평등이다.
  - 1) 법적 평등,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 결과의 평등
  - 2) 권리로서의 평등 (rights-based approach)
    - 1970년대: WID
    - 1980년대: GAD
    - 1990년대 이후: Rights-based approach
2. 북경행동강령에 나타난 성평등 달성전략
  - 1) 성 주류화
  - 2)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비준, 유보조항의 철회, 완전한 이행
3. 성평등 달성여부 평가
  - 1)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정도
    - 각국이 이행하기로 합의한 국제적 선언문서
    - 「북경+15」, 「북경+20」?
  - 2)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정도
    - 비준국이 이행해야 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조약
    - 4년마다 보고서 제출의무,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
4.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본 향후 여성정책 과제
  - 1) 여성의 정책결정에의 동등한 참여
    - 목표: 50:50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정부의 모든 부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레벨에서 필요
    -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의 모든 영역
    - 2000 안보리 결의안 1325: 평화구축에 있어서의 여성의 동등한 참여
  - 2) 여성의 경제력 확보

- 여성고용 증대,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 연금제도, 복지제도의 개혁
- 남녀임금격차 해소
- 3)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등 모든 종류의 폭력방지
  - 포르노, on-line상의 여성폭력 방지
  - 아내강간처벌의 법제화
- 4) 성역할 정형화의 폐지
  -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 가능한 정책
  - 남성의 가사, 자녀양육에의 참여유도 정책
- 5) 소수집단의 여성에 대한 동등한 권리보장
  - 빈곤여성, 농촌여성, 노인여성 등등
  - 이주여성, 특히 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의 인권
  - 탈북여성, 난민여성
- 6) ‘한시적 특별조치’의 적극적 활용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문 25호  
(General Recommendation 25 on Temporary Special Measure)
- 7)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CEDAW)의 비준
  - 1999년 제정, 2000년 발효된 선택의정서의 2가지 기능:
    - . 개인의 진정절차 처리
    - . 중대하거나 조직적인 침해의 경우 위원회의 조사
  - 충실한 협약이행의 보장조치로 현재 68개국 비준, 76개국 서명
  - 한국은 관계부처 협의시 법무부의 반대로 서명도 안함

주제Ⅲ : 『북경+10』 관련 유엔활동

## 『북경+10』 관련 유엔활동

강 선 혜 (여성부 국제협력담당관)

## ◇ 여성지위위원회(CSW : 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 <제49차 여성지위위원회>

- 여성지위위원회는 제49차 회의에서 2000년 유엔의 Beijing+5 특별총회결과와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유엔 제4차 여성회의에서 189개국이 서명한 북경행동강령의 이행 평가예정
  - 기 간 : 2005. 2.28 ~ 3.11
  - 장 소 : 뉴욕
  - 내 용
    - . 북경행동강령의 수행 및 유엔 특별총회 (Women 2000 : 21세기를 위한 성평등, 발전과 평화)의 결과 평가
    - . 당면 사안들과 여성 및 여아의 권한척도와 진보를 위한 전략도출
- 제49차 회의는 모든 유엔회원국과 유엔 옵저버가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가 될 것임(2004년 7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에서 결정된 사항임)
- 여성지위위원회에서 북경행동강령 수행 및 유엔특별총회 결과 평가를 하는 동안 고위급 참가자들이 지켜봄으로써 북경선언과 행동강령의 이행에 대한 노력을 확고히 다질 것임.
- 회의기간에 양성평등을 위한 고위급회담, 양성평등을 위한 유엔의 노력 3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열릴 것임
- 회의 결과는 ECOSOC를 통하여 제60차 유엔총회와 새천년 선언 평가 유엔총회 고위급행사(high-level event)에 전달될 것임
- ECOSOC는 결의안 2004/57에 의거 NGOs가 참가할 수 있고 회의에 참가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음.  
ECOSOC는 2004년 9월 NGOs에 관련 내용을 발송했음
- 참가할 NGOs는 2004년 12월31까지 참가등록 신청서를 여성향상국(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에 제출해야함. 신청서에는 미국 입국비자를 받을 수 없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 대체 할 수 있는 참가자 명단도 포함해

서 제출해야 함.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2004년 10월1일 부터 등록가능하며 2004년 12월 31에 마감

### 【국제여성의 날 International Women's Day】

- 유엔은 1975년부터 3월 8일을 국제여성의 날로 정했으며 세계의 여성들에게 국제여성의 날은 평등, 평화, 발전을 위해 여성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평가하고 의미있는 변화를 위한 결집, 통합,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넓은 의미를 지님.
- 제49차 여성지위위원회 회의 기간동안 국제여성의 날 행사가 치러지나 2005년에는 3월8일 이전에 개최 될 것이며 그 이유는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의 고위급 참가자가 자국에서 3월8일 국제여성의 날 행사를 치를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The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UNRISD)>

- UNRISD는 북경행동강령에서 강조된 중요한 정책사안들을 일깨우기 위해 제49차 여성지위위원회(2005. 2.28~3.11)에서 발표할 성과 발전에 관한 정책 보고서를 준비 중에 있음.

### ◇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 :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 【제7차 아프리카 여성 지역회의】

- 기간 : 2004. 10. 4 ~ 10. 6
- 장소 : 아디스 아바다 (에디오피아)
- 내용 : 북경행동강령의 이행 평가에 있어 아프리카의 기여

◇ 유럽경제위원회(ECE :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를 위한 유럽경제위원회 지역 준비회의】

- 기간 : 2004. 12. 14 ~ 15
- 장소 : 제네바
- 내용 : 경제에서의 여성, 성평등 장려를 위한 제도적 수단,  
여성매매, 현안 문제

◇ 중남미카리브 여성지역경제위원회

(ECLAC :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제9차 중남미카리브여성지역회의】

- 제9차 중남미카리브여성지역회의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적절한 제언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으며 그 지역의 북경행동강령 10주년에 대비한 준비회의로서 중요성을 지님
  - 기간 : 2004.6.10 ~ 6.12
  - 장소 : 멕시코 시티
  - 내용 : 빈곤, 경제자립 및 남녀평등, 제4차 세계여성회의 개최 10주년기념 행사(베이징+10)

※ 중남미 카리브지역의 성평등을 향한 길(Roads Toward Gender Equality in Latin America and Caribbean)이 2005년 제49차 여성지위위원회의 회의에서 베이징+10 행사에서 중요한 문서로서 사용될 것임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ESCAP :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북경행동강령 이행검토를 위한 아태지역 고위급 정부간 회의】



- 기간 : 2004년 9월 7~10일
- 장소 : 방콕
- 내용 : Beijing+10에 관한 정부간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북경행동강령 채택 이후 지난 10년간의 역내 이행 성과  
및 격차를 점검하고 향후 실천과제 제시.
- 프로그램
  - . 일반토의 : 북경행동강령 이행상황에 관한 주요 국가 기조연설
  - . 패널토의 : 북경행동강령이행과 지역 및 지구적 성과 검토
  - . 부속회의 : 여성권한 강화를 위한 전략 및 접근
- 참가자 : 47개 회원국 및 준회원국, ILO, UNHCR, WHO, FAO, UNDP, UNEP, UNESCO, UNIFEM 등을 포함한 13개의 UN 기구의 대표단, IOM 및 ADB를 포함한 5개의 특별기구, 그리고 옵저버 자격의 비정부기구 단체 참가

#### ◇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

**(ESCWA :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북경행동강령 이행 10년간의 평가를 위한 국가 보고서준비 지역훈련워크숍】**

- 기간 : 2004. 3. 28 ~ 4. 1
- 장소 : 카이로
- 내용 : 북경행동강령의 10년간 평가 국가보고서를 준비하는 정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훈련